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 ③

---

#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

---

일시 | 2012년 9월 7일(금)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프로그램

- 15:00 사회                    **장은주**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영산대 교수
- 15:10 발표1                   **'경계정치'로서의 시민정치**  
                                  **조희연**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 15:35 발표2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16:00 휴식
- 16:10 지정토론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녹색교통 공동대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상호** 서원대 교수
- 17:10 종합토론
- 18:00 폐회

## 목차

발제1	‘경계정치’로서의 시민정치 / 조희연	04
발제2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 / 박영선	50
토론1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의 모색과 활동 / 민만기	66
토론2	시민정치의 ‘두 요소’, ‘시민’과 ‘정치’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 / 김윤철	74
토론3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양날개 / 이철희	82
토론4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본 안철수 현상의 가능성과 한계 / 정상호	88

## '경계정치'로서의 시민정치<sup>1)</sup>

---

조희연 /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이 글에서 나는 운동정치의 일부로서의 시민정치를 '제도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정치의 사회화'를 성취하고자하는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실천으로 이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민주주의에서 정치를 둘러싼 각축을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대립으로 정의하고, 시민정치를 일부로 하는 운동정치가 어떻게 제도화된 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정치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행위로 작동하게 되는가를 드러내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시민정치를 다루지 않고, 시민정치를 근대민주주의의 재해석,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각축, 경계정치론 등과 연관시키면서 재의미화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이 글은 조희연의 기존의 글들(조희연. 2006. <장외(場外)정치, 운동정치와 '정치의 경계 허물기'-비합법전위조직, 재야운동, 낙선운동, 광주꼬문>. 신정완·이세영·조희연 외. 2006. 《우리안의 보편성》. 한울.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투트랙 민주주의-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으로 본 한국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2013. 서강대 출판부. 미발간)의 이론편으로 서술한 것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1. 근대민주주의에서의 정치와 사회의 관계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민주주의는 인류의 거대한 정치사적 성취라고 평가된다. 근대 시민혁명은 지배 권력과 사회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시민혁명 이전'과 '시민혁명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변화시켰다. 근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백성'은 근대적 '(인)민'<sup>1)</sup>으로 전환되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권의 궁극적인 담지자이자 원천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근대 이후의 모든 정치체제의 기본원리이자 제도로 인식된다. 민주주의는 그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의 자기통치'로서 모든 인민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적 결정과 정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제도이다.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선거제도, 의회민주주의, 3권 분립, 정당정치 등과 같은 제도적 현실로서 확인된다.

### 1)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특성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근대민주주의와 그 핵심을 이루는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민주주의는 (인)민의 거대한 정치적 성취이지만, 대표자 정치와 (인)민 자신의 정치 간의 괴리 속에서 정립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신분제적 질서에 의해 정치가 일부 상층 귀족계급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전근대적 질서 하에서 (인)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인)민의 정치적 각성과 권리의식의 고양, 그에 기반을 둔 (인)민의 혁명적 저항으로 전근대적 지배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의 정점에 시민혁명이 존재한다.<sup>2)</sup>

사회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의제의 공적 결정을 둘러싼 집단 및 개인의 상호관계와 활동을 '정치'라고 한다면, 시민혁명을 정점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전근대적 지배는 (인)민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질서, 즉 '근대 민주주의적 정치'로 전환된 것이다. 근대 시민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핵심적인 측면은, 지배에 있어 '정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지배에 있어 정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상층 계급에게만 한정되던 정치가 (인)민에게 개방되었다는 것, 또한 (인)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이제 더는 정치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아

감벤 2008, 47)이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인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근대 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치 공간, 즉 (인)민이 자기통치와 스스로 권력 중심이 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의 주체적 정치 공간'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것이 인민의 정치를 이상으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대표자 정치' 형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근대민주주의는 언제나 현실에서 엘리트 대표자 정치로 작동한다.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주인이 (인)민임을 확인하고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민이라는 점을 정초하는 데 성공했으나, (인)민의 지위 — 대표자를 선출하는 '인민주권'은 보유하지만 — 는 직접적인 정치의 주체로 구현되기보다 대의자를 뽑는 선출의 주체로 형식화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대 시민혁명에서 정점에 이른 (인)민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위기에 처한 지배는 (인)민을 '주인'으로 만들어 (인)민에게 근대적 지배를 수용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선출'을 담당하는 '주인'으로 왜소화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근대 민주주의에서 대표자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 등 '제도화된 정치'(협의의 정치)로서 '정치'가 되고, (인)민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행위는 '비(非)정치'가 된다. 따라서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근원적으로 (정치의 출발로서의) (인)민과 (정치를 발생시키는) 사회가 괴리되어 존재하는 체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인)민 주체의 정치'와 '대표자 정치' 간의 괴리는 근본적으로는 (인)민이 구성하는 '사회'와 대표자의 정치로 표현되는 '정치' 간의 괴리이다.<sup>4)</sup> 나는 이러한 근대 시민혁명의 이중성이 근대 민주주의의 '원형적 결손(deficiencies)'을 구성한다고 본다.<sup>5)</sup> 더욱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근대성의 내재적 모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제도화된) 정치'와 '(인)민(정치)' 간의 괴리가 정치를 구성적 일부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본원적인 문제이다.

통상적인 주류 정치학의 흐름에서 보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은 제도화된 의회정치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의제는 제도화된 의회정치의 장에서 제도정당에 의해 타협되고 조정되고 결정된다. 근대 시민혁명의 정신에서 보면 제도화된 대표자의 정치 영역은 (인)민의 정치를 반영하는 '수단적' 영역으로 설정되지만, 현실에서는 후자가 '정치(제도화된 정치 혹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정치)'가 되고 정작 (인)민의 정치는 '비정치'가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제도정치만을 정치로 보는 시각을 탈

피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적인 의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전체행위이며 제도화된 정치는 그중의 일부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근대민주주의는 그것이 지배의 극복이 아니라 근대 지배체제의 작동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전근대적 지배체제가 인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기존의 지배세력에 강제되면서 ‘정치 없는 전근대적 지배체제’가 ‘정치를 구성적 일부로 하는 근대적 지배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지배 혹은 광의의 국가는 정치를 매개로 하여 재생산되는 것이다.

정치를 구성적 일부로 하는 지배가 출현했다는 것은 이렇다. 즉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인 선거를 포함한 제도 정치적 기제들은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다. ‘총탄에서 투표용지로(from bullet to ballot)’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근대 시민혁명으로 고양된 (인)민의 사회적·정치적 요구 앞에서 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로 ‘내전’화된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기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거부한 곳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전면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영국처럼 지배적 세력이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타협적 이행’을 경험했다. 근대 시민혁명기 대의(선거)민주주의의 정립은 봉건적 세력에 대한 내전적 투쟁을 감행하는 (인)민의 요구를 수용해 그들을 정치 주체로 정립하면서도 동시에 대표자가 권력을 갖는 근대 대의민주주의로 ‘타협적으로’ 재정립된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네그리에 따르면, “근대 주권은 내전을 끝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네그리 2008, 289). 근대 민주주의는 (인)민이 획득한 주체적 정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정치를 통해 지배가 전근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의회정치, 정당정치, 선거정치, 다양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양면성을 갖는다. 즉, (인)민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해서 쟁취했다고 하는 측면과 반대로 지배세력이 이를 수용해서 ‘정치를 매개로 하는 근대적 지배’를 재정식화 했다고 하는 측면이다. 여기서 나는 ‘정치에 의한 지배’의 작동이라고 하는 전자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인)민 투쟁으로 쟁취해 지배세력에 강요된 것이라는 성격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6) 새롭게 지배의 일부가 된 정치는 지배가 정치를 통해 작동하도록 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지

배의 내부에서 긴장과 모순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 붕괴한 스탈린주의적 맑스주의에서는 근대 민주주의 혹은 그 일부로서의 정치는 '지배의 음모'에 의해 발생했거나 지배의 '외파'나 형식으로만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계와 동시에 인민의 저항에 의한 '성취물'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성취물로 획득된 진보적 제도들은 근대 이후 지배의 조건이자 제약, 지배의 틈새와 내적 균열선으로 존재하면서, 지배 내부에 (인)민이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표출해내는 작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특별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일정 단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획득된 제도는 지배 내부에서 구성적 긴장으로 — 저항에 의해 획득된 것이므로 — 존재하면서 이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의 근거이자 공간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 인권, 시민권 등도 투쟁을 통해 획득된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비록 이후에 자본가계급과 정치사회적 기득권세력이 이를 무력화·형식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부단히 지배의 내적 균열과 모순을 낳는 방식으로 이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배는 이렇게 (인)민의 저항에 의해서 강요된 '공간'을 지배의 새로운 요소로 재편하고자 한다(여기에 구성적 각축이 존재한다).

셋째, 민주주의를 일부로 하는 지배체제는 국가체제와 경제체제로 구성되는데, 민주주의는 국가체제를 규정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원리로도 작동한다. 여기서 전근대적 지배체제는 왕이나 소군주, 술탄 등 전근대적 권력자가 경제를 통제하는 식으로 국가와 경제가 '일체화'된 체제였던 데 반하여, 근대 지배체제는 국가행정과 경제가 분리된 채로 작동하는 체제로 작동한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이 인민의 해방과 전근대적 국가로부터 경제, 그를 구성하는 자본·시장의 해방의 동시적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시민혁명적 변화 속에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전근대적 국가통제로부터 인민이 해방되는 과정과 동시에 전근대적 국가통제로부터 경제(시장)가 해방되는 과정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민주주의의 복합성은 전근대적 절대주의세력이 타도되면서, 민주주의가 동반하는 자유와 자율이 인민에게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자본과 시장에게도 주어 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방된 인민으로 구성되는 사회는 이전의 전근대적 국가 하에서 신민(臣民)으로 구성된 사회와는 다르다. 이미 인민은 백성에서 인민으로 변화되었고 그 인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바로 그러한



인민으로 구성된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사회를 의미한다.7)

여기서 근대적 지배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인민은 국가에 대면하여 정치의 주인이 되는 존재로서의 '공통성'을 갖지만, 그 인민은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에 의해서 차별화된 존재가 되는 '상이상'을 갖는다. 이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은 바로 경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체제의 역사적·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렇기 때문에, 근대 인민은 두 가지 존재의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국가에 대립하는 시민권적 '공통성'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와 다양한 차별의 역사적·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그 삶이 규정되는 계급적 존재이다. 노동자계급은 바로 근대지배체제에서의 '기본' 계급의 성격을 갖는다.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은 '차이의 선'이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선이 된다.

기존의 지배체제 하에서 국가(이는 근대 민주주의적 국가이다)는 현존하는 계급적·사회적 균열(새롭게 인민이 문제화하는 균열)의 재생산을 담당하지만, 반대로 인민은 국가를 통해서 그러한 균열을 재생산하는 경제와 차별의 역사적·문화적 구조(가부장제 등)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기존 지배체제 하에서 계급적·사회적 균열을 따라 지배적 집단은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당연히 국가에 대립하는 투쟁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즉, 한편에서는 국가에 대립하는 시민적·인민적 투쟁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적·사회적 투쟁이 존재한다. 전자는 계급적·사회적 균열을 넘어 국가에 대항하는 어떤 공통의 투쟁이고, 후자는 경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계급적 균열선을 따라서 적대적 각축을 하는 투쟁이 된다.

여기서 근대적 지배체제와 인민의 관계는 전근대적 지배체제와는 다른 복잡성을 갖게 된다. 모든 지배체제(국가체제와 경제체제)는 불완전하고 결함을 갖는다. 이 국가체제와 그것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민의 삶을 규정하고 그 체제의 불완전성과 결함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인)민의 삶에 각인하게 된다. 여기서 인민은 그 체제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저항성을 갖게 된다(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도정치를 통해 수렴되거나 사회적 정치에 의해 기성 정치에 반하는 정치성을 구성된다).

결국 근대 지배체제와 (인)민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그 결함과 불완전성에서 나오는 모순으로 규정하는 관계뿐만 아니라—그 체제의 작동원리가 민주주의 위에서 있기 때문에—(인)민이 그 불완전하고 결함을 갖는 국가체제의 권력담당자를

정치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또한 국가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공적 통제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은 국가를 통해서 경제에 반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근대 지배체제는 '정치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국가(이것은 광의로 이야기하면 경제를 포함하는 지배체제 일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와 그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작동하는 경제(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구성되는데, 이때 인민은 한편에서는 그 국가와 경제에 의해 그 경제적 삶이 규정되는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제에 대한 공적 통제권을 갖는 국가의 주인이 되며 국가를 매개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도정치라는 표현을 사용되는데, 이는 협의의 의미에서 의회정치, 정당정치, 선거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협의의 제도정치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제도정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국가와 경제와의 결합 속에서 존재한다. 국가관료와 자본권력의 이해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도정치권력과 결합되어 존재한다. 국가와 경제의 재생산 논리는 특정한 형태로 제도정치에 반영되어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제도정치는 지배체제의 논리가 각인된 정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민은 부단히 그 주체성이 부단히 새롭게 재구성되는 존재라고 하는 점이다. 인민은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는데, 인민은 그 주체성이 지배체제에 의해서 부단히 규정되지만, 반대로 그러한 규정을 넘어서서, 부단히 차별의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을 문제화하고 저항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인민은 그 주체성이 부단히 변화하는 존재이다. 즉 인민의 정체성(peoplehood)의 구성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하나의 계급적·사회적 균열선을 따라 주어진 차별을 그 차별의 피해자가 쟁점화하고 저항할 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된다. 여기서 기존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시민혁명 당시의 많은 사회적 차별선들(지역, 종교, 젠더 등)은 쟁점화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민이 주체화되면서 19세기와 20세기에 계급적 착취와 차별이 쟁점화되고 정치화되었다. 20세기 후반 성적 차별,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분할선을 경계로 하는 차별이 쟁점화되고 정치화되었다.

이렇게 주체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을 재생산하는 국가와 차별의 문화적·역사적 구조와 기성의 경제구조, 그것을 법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잠재적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근대 민주주의적 정치와 그 일부로서의 제도정치는 현실에서는 내부로부터 자본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에 의해 부단히 식민화되고 포획된다. 즉, 민주주의는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자본권력과 시장권력)에 의해 부단히 포획되고 자본주의와 모순되지 않는 식으로 존재하도록 견인·변화된다. 또한 국가관료권력,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적·성적·지역적 기득권세력들은 현실의 민주주의가 그들의 특권과 대립하지 않도록—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혹은 그것을 이용하면서—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의 민주주의는 기존하는 권력들과 타협적으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자본권력과 시장권력이 민주주의를 식민화하여 현실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순되지 않게 공존하도록 한다.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적인 세력에 의해 부단히 식민화·포획됨으로써 부단히 엘리트민주주의, 나의 표현으로는 ‘과두제적 민주주의(oligarchic democracy)’(조희연 2008; Cho 2008)로 전락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제도정치는 언제나 과두화되고 기득권에 포획되면서, 기존의 권력들과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제한된다.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린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과두계급의 순환지배를 세력해주는 과정’(랑시에르 2011, 111)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식민화하고 제한하는 권력은 자본권력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식민화·포획은 자본권력에 의한 포획을 경제적 기초로 하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가부장적 질서와 공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차별체제에 의해 포획되어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은 포스트구조주의적 흐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점이다.<sup>8)</sup> 그래서 언제나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요구와 기대(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와 괴리되어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 결정론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확장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포획되어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권력들에 의한 제도정치의 포획을 상쇄하는 운동정치의 도전과 위협이 있을 때, 즉 (인)민의 계급적·사회적 저항이 있을 때, 제도정치는 그 만큼 (인)민의 다양한 계급적·사회적 요구가 표현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를 민주주의의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라고 말해보자. 이런 점에는 나는 모든 개혁은 '강요된 개혁'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래로부터 기성권력들의 식민화와 포획을 상쇄할 때 제도정치에서 다양한 계급적·사회적 요구가 수렴되는 '개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포획하는 현실의 '권력들'의 독점을 해체하는 '탈독점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급진 민주주의적 운동정치의 과제이기도 하다.

여섯째, 어느 사회에서건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불안전성과 결합으로 인해—대중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잠재적 저항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은 즉자적인 '사회적인 것(the social)'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매일 생활하면서 많은 불만과 분노,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대부분은 현존하는 정치와 통치, 권력에 관련한 불만, 분노, 좌절로 생각되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특정한 불만과 잠재적인 저항성이 기존의 정치와 통치에 대한 적극적인 불만과 비판, 저항의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나는 이를 '정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 정치성은 기성의 정치로부터 이반된 새로운 정치적 요구와 이해, 지향, 감수성 같은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두면 좋겠다. 이것은 잠재적인 저항성이 현재화된 저항성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체제의 모순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희생자집단의 저항이나 다양한 '목적의식적인' 사회운동 집단의 실천이다. 이러한 저항이나 실천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할 때 불만과 잠재적 저항성은 정치적 요구와 이해, 지향, 감수성으로 전환된다(기존의 학술적 개념을 사용한다면, '저항적' 성격 혹은 '기존의 정치에 반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치성들이 기성정치조직들—정당 등—에 의해 충분히 대의·반영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정치적 불신과 이반(離反)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성정당에 대한 광범한 불신과 이반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정치성은 기존 제도정치의 혁신과정에서 일정하게 수렴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기성 정당으로 수렴될 수 없는 급진적 정서로 지속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급진적 정서가 기성정당이 '반동적'이 됨에 따라 반체제적이고 기성체제를

이탈하는 정치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성이 기존의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고, 이를 둘러싸고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에, 제도정치세력들 간의 각축이 전개된다.

여기서 광의의 정치(제도정치와 운동정치 포괄)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구성되는 과정과 정치적인 것이 제도화된 정치 속에 인입(引入)·가공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이다. 전자를 일차적 정치화 과정이라고 하면 후자는 이차적 정치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라고 할 때 먼저 사회적인 것이 적대성을 내장한 '정치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일차적 정치화 과정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경계'가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도정치가 이러한 잠재적 정치성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제도정치 외부의 정치적 불만이나 기대 같은 것으로 존재하고 이럴 때 운동정치의 영역은 확장된다.

다음으로 광의의 정치는 다양한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제도화된 정치 내에 대의되고 그 내부에서 가공되는가 하는 점을 포함한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거에서 제도정치 내의 여러 정당들 간의 지지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상적인 과정에서도 제도정치는 잠재적 정치성이 '반(제도)정치적인' 것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숙의'적 과정에 의해서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전유하고 수용하고자 하게 된다.

운동정치는 일차적으로 일차적 정치화과정, 즉, 사회적인 것(여기서는 저항적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며, 제도정치는 바로 이러한 것이 다시 제도화된 정치의 영역으로 인입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즉, 이차적 정치화과정이 된다. 일차적 정치화과정과 이차적 정치화과정이 상호작용하면서 민주주의가 구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은 이런 의미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투트랙적 상호작용과정이 된다. 이런 인식 위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제도화된 정치로만 동일시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현실적 내용과 질은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사회적·계급적 투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체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

적·현재적 구성물”(조희연·김동춘·유철규 2008)로 파악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위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제도정치중심주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와 사회(사회 내의 정치적 활동) 간의 경계에 대한 고정화된 시각이다.

먼저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시각’의 문제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행위 중의 일부를 제도화된 정치로 합법화하고 제도정치로 반영한 특수한 정치형태이다. 정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제도정치가 정치의 중심적 활동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정치가 바로 정치 일반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 지배적 집단이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정치질서에서 ‘비정치’로 규정되는 활동을 선택적으로 내부화하고 포섭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정치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지배의 정치를 재생산하는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이중적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한편에서는 소수의 상층집단에 한정되어 있던 정치를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자들의 정치로 재정립하여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를 제도정치로 한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제도정치만을 정치로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적인 의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전체행위이며 제도화된 정치는 그 중 특정한 근대적인 정치형태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활동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의 일부만이 근대적 정치 프레임에 의해 제도화된 정치로 규정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를 고정화된 경계를 갖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다. 첫째의 시각을 전제로 할 때, 정치와 사회의 관계는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며, 근대 대의정치의 틀 내에서 비정치로 인식되는 활동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제도정치를 구성적 일부로 하고 있지만, 제도정치의 외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활동을 ‘비(非)정치’로 규정하여 정치의 외부에 위치시킨다. 원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혹은 역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대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 정치의 내포와 외연은 가변적이고 ‘사회적으로 구

성된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9)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사회적 활동 중의 일부를 제도 정치로 개념화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정치는 정치와 비정치 사이의 특징하게 구조화된 '경계(border, boundary)'를 갖는다. 예컨대 근대적 프레임에서 사적인 영역—예컨대 가족의 영역 등—의 일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일종의 합의된 '비정치'의 영역이 된다. 이러한 합의된 비정치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자—특히 약자—가 이를 쟁점화하고 '정치화'할 때 오랜 투쟁을 거쳐서 그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정책 이슈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기술관료적 결정' 즉, 국가행정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울리히 벡(1997)이 지적하듯이 많은 환경정책 결정이나 경제정책 결정들은 '전문성'에 의해 신비화되면서 정치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관료적 결정영역에 존재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서구의 신사회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사실 근대대의민주주의 프레임에서 '비정치'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운동이었다. 즉 근대적인 공(公)과 사(私)와 사의 구분에서 사의 영역에 존재하던 행위들—예컨대 가정폭력, 가정 내의 권력관계 등—을 집단적인 갈등의 주제로 이동시켰다. '특정 지형 너머의 정치'가 정치로 전화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정치와 근대민주주의 자체가 역사적 구성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로의 이행의 분기점이 된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고정화된 제도정치가 선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의 구성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다양한 급진적 분파들은 근대정치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가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투쟁하였다.

나아가 정치와 사회의 경계가 가변적이고 정치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거시적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한국과 같은 이행기 민주주의에서 독재 하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정치가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60년대 이후 군부독재 체제 하에서 제도정치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의 일부만을 대표하는 식으로 왜소화되어 존재하게 된다. 군부독재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행위 중 군부독재에 '종속적인 정치'만을 합법적 제도정치로

보장하고 그것에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행위를 억압하고 그것이 제도정치에 표출되는 것을 통제하여 왔다. 바로 군부독재의 이러한 배제적 정책 때문에 제도 정치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한 협소한 정치만을 정치로 규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를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독재 하에서 협애화된 정치는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현저하게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라는 것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을 통하여 정치와 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의해서 구조화된 어떤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무엇이 정치인가하는 정치의 '경계'와 정치에서 무엇이 의제화되고 무엇이 정책화되어야 하는가하는 정치의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결코 고정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제도정치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은 비정치로 규정되어 정치의 외곽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동정치의 일부로서의 시민정치는 스스로를 제도정치, 정당정치에 구별되는 정치로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회의 정치, 인민의 정치의 일부가 근대민주주의에서 선거정치-의회정치-정당정치로서 제도화되었을 뿐이다.

## 2) 근대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

### — 계급적·사회적 투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그 결과로서의 정치의 구성

그렇다면 근대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의 경계,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근대사회 정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나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절차나 제도정치의 규칙이 아니라 계급적·사회적 투쟁과정이자 그러한 투쟁에 의해서 정치의 경계와 내용이 규정되는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의 구성 자체도 이러한 사회적·계급적 투쟁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정치 자체가 계급적·사회적 투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변적이고, 비(非)고정적인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계가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가 사회의 정치적 삶의 보편적 형식으로 자리잡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정치적 삶의 보편적



형식 속에 담겨지는 정치의 내용과 그 경계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에 의해서 부단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특징이자 장점이고 보편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역사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계급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sup>10)</sup>

전통적인 맑스주의 프레임 속에서 주된 관심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였다. 특별히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와 국가의 관계였다. 여기서 국가권력이 사회 내의 어느 계급의 손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치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 간·집단 간의 상호관계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국가론의 흐름에서 정치라는 것을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한 것은 그람시였다. 주지하다시피 맑스주의적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계급성과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폭력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가지고 지배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서 활동하는 도구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그람시에게서 국가는 이러한 폭력적인 도구적 국가를 넘어서서 정치의 실체로 등장하게 된다. 최소한 근대국가에서는 그러하다. 근대국가는 정치 자체가 국가의 구성적 일부가 되는 새로운 지배형태이다. 그람시는 맑스주의 국가론의 틀 내에서 정치를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레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람시는 동-서의 문제에서 서(West) 국가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Lester 2000, ch. 2).

물론 그람시의 중요한 관심대상은 이 정치의 문제 자체보다도 헤게모니론을 중심으로 하는 각축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였다. 그러나 부치 글룩스만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정치는 곧 헤게모니’이다(Buci-Glucksmann 1980, vii). 이렇게 보면 그람시가 시민사회라고 범주화한 것은 분화해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정치는 바로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에 내포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한다. 지배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고 그것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가 각축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지배에 대한 동의가 만들어지는 어떤 활동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이것은 그람시가 정당을 시민사회 기구로 파악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그람시가 시민사회라고 보았던, 국가에 대한 동의가 창출되는 관계와 활동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적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즉, 제도화된 정당들이 수행

하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비정치적(비정당적) 기구들이 수행하는 정치이다. 전자가 제도정치이고 후자가 바로 사회적 정치이고 그 일부로서 운동정치가 존재한다. 사실 그람시가 이러한 양자의 정치 자체를 모두 “시민‘사회’”로 인식한 데에, 바로 페리 앤더슨이 지적하는 그람시 이론의 모순지점이 존재한다. 즉 그람시에게서 광의의 국가는—동의창출의 장이 되는—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국가와 사회가 곧 동범위의 실체가 돼버리는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은 강압과 동의 창출의 ‘기능적’ 측면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가는 강압으로서의 국가와 제도화된 정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단지 여기서 그람시가 시민사회를 국가적 질서의 일부로 파악한 문제의식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도화된 정치와 구별되는 시민사회적 정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순수히 비국가적인 시민사회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정치의 경계를 상대화시키면서 제도화된 정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제도화된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전자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의 정치는 후자의 정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적 활동은 제도화된 정치와 (시민)사회적 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sup>11)</sup>

전통적인 맑스주의에서는 정치를 일부로 하는 국가가 사회로 흡수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맑스주의의 ‘국가소멸론’). 이는 사회가 정치를 포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적 공간은 자본주의의 계급적 관계에 의해 분열된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총체화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공적인 공간 및 그를 통해서 작동하는 공론의 영역으로서의 정치의 공간을 내포한다. 맑스주의 맥락에서 이러한 의미의 정치를 발견한 것은 그람시였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사회라는 틀로 바라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람시의 논의를 재구성하는데, 반대로 정치가 사회를 포섭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이 존재한다.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는 사회를 반영하는 개방된 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여기에 사회를 무시된다. 이 점에서 나는 이 글에서 맑스주의적 맥락에서의 그람시의 논의를 따르되, 그람시의 정치를 제도화된 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정치, 그 일부로서의 운동정치)로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국가는 폭력을 본질로 하지만 폭력

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치의 공간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며 (시민)사회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작동한다('정치'의 국가화'의 경향). 여기서 '정치'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정치가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치가 각축하는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자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 이 글의 용례로 보면—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를 포괄하는— 정치가 지배적 집단의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피지배적 집단의 대항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발전의 쌍방향성을 나는 여기서 '정치'의 국가화(statization of politics)'와 '정치'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politics)'로 표현한다.

이런 해석을 앞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규정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즉 민주주의를 계급적·사회적 투쟁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투쟁의 일부로서 정치의 구성을 둘러싼 투쟁도 존재한다. 근대민주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정치의 구성을 둘러싼 투쟁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근대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의 구성을 둘러싼 사회의 활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한 최초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갖는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를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의 두 가지 흐름이 각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의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장, 특히 제도정치가 국가화된 지배에 대한 동기가 창출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의 사회화'는 반대로 앞서 서술한 대로 정치를 사회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즉, 정치가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정치가 사회적 주체들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되도록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부연한다면, 정치'의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특히 제도정치—가 사회의 요구들을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정점으로 하여 재생산되는 지배의 헤게모니적 유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의미한다. 예컨대 근대대의민주주의가 정착을 했을 때 그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지배가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 이것이 파괴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배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지배일반과 정치가 충돌하지 방향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정치가 폭력의 독점체로서의 국가의 지배를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기제로 정치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지배 체계모니가 '체계모니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실천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배세력은 정치적 장에서의 전략적 실천을 통해 정치가 지배의 유기적 일부로 기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의 국가화란 지배의 체계모니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 체계모니적 실천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근대권력의 특성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근대권력은 그것이 인권주권에 기초하여, 권력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민(民)에서 연원하는 보는 인식 위에서 있는 체제가 된다. 여기서 통치의 정당성이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하는 체제 내에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 기초하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근대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는 국가의 일부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게 된다.

반대로 정치의 사회화라고 했을 때 국가에 의해서 정치의 특정한 구조화—그 한계와 내용,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의 반영 등—에 대응하여 민중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제도정치로 정치를 한정하고자 하는 정치의 국가화에 대항하여 정치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기되는 것이다. 정치의 국가화는 기존하는 정치적 질서—특히 근대 이후에는 근대 대의민주주의—가 지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인 반면에 사회의 정치화는 기존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화의 동력은 바로 사회 내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의 정치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의 두 대립 속에서 정치는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하는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정치는 '정치'의 국가화에 대응하여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투쟁이나 활동에 의해서 구성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치는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 속에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사회화의 행위들은 근대민주주의에서 '대의의 대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근대 시민혁명과 근대민주주의의 형성 자체가 '본원적 결합'

을 지니고 출현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에서이다. 근대 시민혁명은 인민이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이자 '주권재민'을 확인했지만 대표자를 통해서 자신을 대의하는 '대의민주주의'로 귀결되었다. 이 대의민주주의는 언제나 '엘리트 민주주의'로, 그리고 기존의 독점적 권력들에 의해 부단히 식민화하면서, '인민의 자기통치'의 기제로서는 언제나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민의 자기결정행위들이 다양한 직접행동이나 운동정치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하는 운동 혹은 운동정치는 이런 견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대의의 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제도정치가 본원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도 본원적으로 '대의의 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체제에 의해서 특정하게 제도정치가 왜곡되고 억압될 때 이러한 '대의의 대행'의 성격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대의의 대행은 근대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대의'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기구들이 불구화되고 대의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제도정치 외의 운동과 기구들이 준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근원적으로 이러한 근대민주주의의 불완전성과 본원적 결함 때문에 제도정치가 대의의 독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이켜 보면 근대 민주주의는 한 번도 정당정치나 의회정치 등 제도화된 정치로만 동일시되지 않았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구로서의 정당이 인민의 정치적 대의체로서의 기능을 독점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본원적으로 대중의 직접행동이나 운동정치는 대의의 대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대안 대의운동'(주권적 자기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관계에서 이러한 '대의의 대행'의 성격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제도정치가 지배체제에 의해서 현저히 통제되어 대의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축소될 때, 운동정치(나아가 대중의 직접행동)에 의한 대의의 대행, 나아가 대안적인 대의 현상은 확대되게 된다.

### 3) '정치의 국가화'의 기제들과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활동형태들

그럼 여기서 정치의 국가화가 어떤 기제로서 작동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정치가 지배의 헤게모니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의 국가화'의 기제들을 나는 금단(禁斷), 배제(排除), 선택적 포섭(包攝)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금단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을 매개로 하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정치적 활동을 반(反)사회적인 혹은 반(伴)국가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표출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다. 금단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활동은 도저히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특정한 사회적 활동, 혹은 정치적 사회활동이 원초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사)합의<sup>12)</sup>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배제는 국가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제도정치적 장에서 표출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강압적 수단—법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제도정치에 진입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재 혹은 권위주의 하에서 이러한 배제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배제와 금단의 차이는 금단이 의사합의에 기초하여 비정치를 창출한다고 하면 전자는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 비정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배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단이 대중들의 '상식'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하면, 배제는 '상식'에 의해 논란이 된다. 일부 집단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집단은 이를 강압적 배제로 이해하고 이를 의문시한다.

이런 점에서 금단의 경우는 '정치의 경계'와 특정 사회의 특정 국면에서 존재하는 '도덕의 경계'가 일치하는—최소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배제의 경우는 양자가—부분적으로건 전면적으로건—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특정하게 획정된 정치의 경계를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금단과 배제 사이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강압과 동의는 사실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다. 특정 시공간 속에서 대중들의 태도가 자발적·비자발적 순응의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는 금단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비정치의 경계에 대해서 대중들이 저항적 태도를 강력하

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배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국면에서 금단으로 인식되던 기제가 대중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배제의 기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금단의 기제와 달리 배제의 기제에 의해서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는 (인)민으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제도정치 외부에 있는 정치'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의의 대행'으로서 대중에게 일정하게 인식된다. 개발독재체제에 의해서 제도정치가 불구화되고 그것이 대중 일반에 의해 '합의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이나 그들의 활동이 대중에 의해서 자신들의 '진정한 대의(대표)'로 인식되는 것이 이러한 예가 된다.

다음으로 선택적 포섭은 기존 제도정치의 위기가 극대화되면서 정치와 사회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시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포섭은 금단이나 배제의 기제에 의해서 작동하던 정치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와 정치의 괴리에 대한 인식 위에서 기존 제도정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적 정치활동을 제도정치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흡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의제들을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존 정치와 괴리된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흡수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의 관점에서 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와 내용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국가화는 이러한 금단, 배제, 선택적 포섭의 기제를 통하여, 제도정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정치의 사회화는 당연한 '금단의 지형을 해체하고자 하며, '배제'의 지형에 저항한다. 민주화 이후 지배적 매카니즘이 되는 '선택적 포섭'에 대응하여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며 제도정치의 지형 자체의 '급진적 확장'을 도모한다. 민주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배제의 기제'가 중단되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정치세력에게 제도정치가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정치의 지배적 세력은 선택적 포섭을 통해 제도정치의 재안정화를 도모한다. 반대로 운동정치는 선택적 포섭에 의한 안정화에 도전하면서 금단의 지형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며 선택적 포섭을 뛰어넘는 '제도정치의 급진적 확장'을 추구한다. 이것이 민주화 이후의 투트랙의 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

다음으로 국가와 정치의 관계에서 두 극단의 유형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시

가 지적하듯이, 국가는 폭력으로서의 정치사회와 동의로서의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고 할 때, 국가가 완전한 폭력과 강압으로 통치하는 경우와 완전한 동의로서의 국  
가를 상정해 볼 수 있다.<sup>13)</sup> 전자는 국가통치세력이 민중의 동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는 강압의 필요성이 전혀 없이 민중  
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가 완전한 폭력 혹은 압도적인  
폭력으로 작동하게 될 때 거기에는 정치가 소멸되거나 주변화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의 폭력성이 완전히 극복되거나 혹은 폭력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  
정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사실 '이상향'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는 현실  
에서 많이 나타난다. 사실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체제나 제3세계의 극단적인 군부  
독재, 유고와 같은 내전적 상황에서 소수와 인종에 대한 다수와 인종의 폭력통치  
도 그러할 수 있다. 나는 후술하겠지만 광주의 학살은 바로 국가가 폭력으로 일체  
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후술하겠지만 광주교문은 '정치와  
사회의 일체화'가 실현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물론 이러한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정치의 사회화'의 최고의  
형태로서의 '정치와 사회의 일체화'는 '정치의 소멸'과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다. 국가가 폭력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정치의 고유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보았던 그  
람시의 통찰력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정치가 사회로 환원되고 정치가 사회로 일  
체화되어 정치가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도 도출할 수  
있다. 전자에 우파 전체주의의 유혹이 있다고 하면, 후자에 좌파전체주의의 유혹  
이 있는 것이다. 이 쟁점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화'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사회  
의 모순의 극복태가 과연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극복 내지는 일체화로 갈  
것인가 국가의 억압성의 극복과 동시에 그 분리의 보존 위에서 '사회적 정치'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쟁점과 연관되어 있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나는 '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우(愚)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대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의 내적 속  
성으로 자리잡은 성찰성과 공공성, 소통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의 '사회적 정치'  
모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정치의 국가화'의 힘이 언제나 작용하며 '정치의 국가화'의  
극단적 형태는 국가가 폭력과 일체화되는 것이라는 점, 그에 반대하는 정치의 사  
회화는 정치의 소멸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가의 폭력성을 극복한 이후  
에도 '정치와 사회화'의 현실적 제도형태들은 다양하게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현존사회주의의 '좌익전체주의'화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민의 자  
기통치'를 실현하는 현실형태들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정치가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 속에서 구성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정치의 사회적 구성시도는 두 가지 지점에서 전개된  
다.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행위들은 기존 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동시에 정치의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정치의 경계를 확장하  
거나 뛰어넘으려는 행위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제도정치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는 기존의  
정치에서 제도화된 것과 비제도화된 것의 경계,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변화시키  
려는 것이며, 후자는 정치가 기득권 구조에 긴박되어 있는 상태를 변화시켜 제도  
정치가 기존에 반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들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경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전자는 정치의 '과정  
적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치의 '내용적 경계'를 넘  
어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와 같이 기존의 제도정치가 반영하지 못  
하는 사회적 요구를 담지하는 특정한 사회적 투쟁을 정치의 경계 외부의 비정치  
적 행위로 위치지운다는 점에서 후자 역시 경계투쟁이 된다.

제도정치의 경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집단과 주변적 집단  
(정당 등)의 '타협적 공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운동  
정치는 그 타협적 공존의 지형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지배적 제도정당들은  
타협적 공존의 지형을 창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FTA주제나 해군기  
지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입장 변화를 보자).<sup>15)</sup>

이런 점에서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은 사실상 '경계투쟁'의 성  
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즉 과정적 경계와 내용적 경계를  
둘러싼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국가화는 정치의 경계를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하여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경계를 부단히 고정화시키고 그 경  
계를 민중들이 동의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의 사회  
화는 바로 그 경계의 부단한 상대화와 경계 뛰어넘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사회화는, 바로 정치의 경계가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이라고 보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된다. 지배는 정치를 특정한 정치만을 제

도정치의 경계 안에 위치지우고—합법적, 제도화된 정치로 위치지우고—민중들의 사회적 요구를 지배가 정한 수준과 방향에서 수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의 사회화는 바로 이러한 지배가 설정한 정치의 경계들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를 민중의 주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지배의 질서에 순응하는 민중의 수동화를 지향하며, 후자는 지배의 질서를 넘어서는 민중의 능동화를 지향한다. 즉 정치의 국가화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수동화를 지향한다. 민중들의 요구가 제도정치에 수렴되는 한계 내에 위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흡수됨으로써 민중에 대한 지배의 동의가 유지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에 정치의 사회화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능동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기존하는 정치의 기제를 뛰어넘는 민중들의 능동화가 바로 정치를 기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의 사회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의 대립각축은 민중의 수동화와 능동화의 각축으로 된다.<sup>16)</sup>

모든 공동체에서 정치와 사회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모든 정치는 사회와 일치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회화를 동력은 어떤 사회에서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정치와 사회의 괴리와 불일치는, 어떤 정치도 사회구성원들의 전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정치는 불평등의 법적 보증체로서의 국가에 의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모든 사회에는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동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존 정치와 사회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정치의 사회화를 향한 새로운 동력들이 출현하게 되면 기존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기성정당에 반대하는 ‘반체제적 정당’(Aabedi 2004)의 등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물론 기존정치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요구를 흡수하는 선택적 포섭이 나타나게 된다.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행위들은 그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보면 온건한 타협적 흐름과 급진적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 타협적 흐름은 기성 정치의 경계를 넘으면서도 그것이 기성의 정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성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급진적 흐름은 기성의 정치에 대한 단절과 변혁을 지향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온건한

흐름은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존재론적 긍정 속에서 이를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추어 보완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현재의 한국의 시민정치는 사회적 정치의 온건한 흐름 속에 위치지운다.

정치의 사회화의 흐름이 정치의 국가화와 각축하면서 존재한다고 할 때, 국가는 타협적 흐름 속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성의 정치의 경계와 내용을 재생산하고자 하게 된다(그래서 시민정치는 한국에서와 같이 주류적 제도정치의 '선택적 포섭'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급진적 행위들은 근대대의민주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정치를 뛰어넘고 그것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출된다.

여기서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지향—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과 그 내용—민의 직접통치와 사회적 요구와 일체화된 정치—을 실현하고자 하는 각각의 흐름을 교차시키게 되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성을 뛰어넘어 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 정치를 사회의 요구와 일체시키고자하는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온건한 흐름은 참여민주주의라던가 토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정치를 사회적 요구와 일체화하고자 하는 온건한 흐름은 자본주의 내의 다양한 경제개혁운동이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을 지향하는 흐름 등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는 두 가지 흐름 모두에서 급진적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은 '정치의 국가화'의 각종 기제들—금단, 배제, 선택적 포섭 등—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즉, 금단의 기제에 대항하여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경우에도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금단의 기제가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집단이 다수자 집단에 편입되어 대의적 공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투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수자 집단에의 편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독립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상이한 지향을 갖는 국가 및 정치를 구성하고자 하는—예컨대 이슬람근본주의적 국가와 정치를 만든다거나 혹은 사회주의적 국가와 정치를 지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투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국가가 폭력으로 일체화되는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항하는 '정치의 사회화' 운동은 묵종이나 침묵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항폭력'적인 투쟁형태—테러나

무장투쟁 등—로도 표현될 수 있다.

결국 정치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각축은 다양하게 전개되며, 하나의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은 이후 '정치의 국가화'의 소재로 작동하기도 하며, '정치의 국가화'는 새로운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저항의 출발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제도)정치의 상대성'을 언제나 전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와 사회의 관계, 정치의 외연과 내포는 언제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들의 의식에 따라서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 — 운동정치 활성화 없이 제도정치 혁신 없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 과정에서 사회, 그것을 구성하는 인민은 '근대 대표자 정치'와 '인민 자신의 정치'의 괴리 사이에서,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정치와 사회의 괴리 사이에서, 정치의 사회화를 향한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앞서 서술하였다. 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의 직접행동(direct action)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조직화된 사회운동에 대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 1) '정치의 사회화' 과정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의 관계

이러한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그 조직화된 형태가 바로 사회운동이라고 하겠다. 제도정치의 관점에서는 '비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으나 정치를 그 원천으로서의 사회와 일체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이 바로 사회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수행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social politics)'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앞서 나는 기본적으로 근대 (제도)정치가 기본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근대 민주주의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 괴리는 특정

역사적 시공간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며, 이 괴리를 인민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인민의 직접정치가 행해지며, 이것이 '사회적 정치'가 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사회적 정치로 본다. 운동정치는 사회적 정치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조직성과 지속성을 갖는 집단적 실천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 중 조직화된 운동적 실천을 운동정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사회적 정치는 핵심적으로는 운동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사회운동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사회운동을 제도정치와 구별되는 사회적 정치로 규정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생활정치(life politics)', '영향력의 정치', '하위정치 혹은 아(亞)정치(sub-politics)'(백 1998), '비제도적 정치', '포괄의 정치'(Cohen and Arato 1992)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스스로를 '정치'라고 개념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가 정치의 중심임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본원적으로 사회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지 전근대사회에서는 그것이 특정한 사회집단에 독점되어 있었고 근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도정치로 흡수되어 규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사회의 정치적 활동이 한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화된 정치로 표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도정치의 중심성을 전제하고 사회운동을 의제적(擬制的) 정치로 보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제도정치와 사회적 정치를 정치의 두 가지 형태로 보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제도정치와—그 제도정치를 사회화하고자 하는—운동정치를 사회의 정치적 활동의 두 가지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정치가 근대민주주의에서 제도적으로 위임받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운동정치는 사회운동에 의해서 수행되는 비제도적 정치로서 제도정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정치만을 정치로 한정하지 않는 인식은 한국에서는 '장외(場外)정치'라는 개념 속에 발전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장외정치라는 것이 한국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독재 하에서 제도정치의 정당성의 극도로 약화되면서—후술하는 재야운동과 같이—제도정치 외부의 사회운동적 활동이 정치적 활동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면서 기인한다. 장외정치는 장내정치 혹은—의회와 같은—제도화된 공간에

서의 정치가 정치의 전부가 아니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비정치적 활동이 중요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장외정치라는 개념은 독재라는 특수한 국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를 일반화시켜 본다면 정치가 정치의 본래의 주체이자 주인이 사회구성원의 의사와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언제나 정치는 제도화된 정치를 넘어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사회와 불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본다면, 장외정치라는 것은 정치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에서 민주주의정치는 단지 제도화된 정당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제도정당들과 운동조직들, 광의의 의미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각축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는 근대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의 정치성을 대의하는 중심적인 제도적 장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도정치는 인민의 정치성을 구성해내는 또 다른 운동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된다. 즉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은 단일트랙이 아니며, 제도정치만으로 파악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투트랙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투트랙의 각축은 대중의 정치성(性)을 특정한 방향으로 전유하고 수렴하고 구성하기 위한 각축이 된다(앞서 일차적 정치화과정과 이차적 정치화과정을 언급하였다). 특정한 국가체제와 경제체제는 대중의 사회경제적 삶의 구조로서 작동하고 그 구조 하에서 살아가면서 대중은 다양한 정치적인 요구와 이해, 지향과 기대 등을 갖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정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정치성을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적 선호로 전환시키고자 하며, 운동은 기성정당에 대한 '반(反)정치성'으로 구성하여 기성정당질서를 변화의 동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내에서의 경쟁(제도정치)은 주어진 '지형(地形)' 내에서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급진적 정당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이른바 "선거사회주의(electoral socialism)의 딜레마"이다(Przeworski 1986). 다양한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다.<sup>18)</sup> 정당은 기존의 지형 위에서 '지지경쟁'을 하는 국가장치이고 운동은 그러한 지지경쟁의 지형 자체를 변화시켜 지지경쟁의 방향과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제도

정치 내의 정당들 간에 지지가 배분되는 과정에 개입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체제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대중의 잠재적인 저항성이 어떤 정치성으로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각축이 존재하며, 그것이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기성 정치의 지형을 넘는 방식으로 전유하려는 것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기성 정치의 프레임의 확장 혹은 혁신을 통해서 전유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정치적 지지획득을 고정된 지형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는 지형변화를 통해서 제도 정치 행위자들의 행위양식을 바꾸게 된다).

대중의 잠재적인 저항성을 기존의 정치에 반하는 정치성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체제의 모순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희생자집단(victim)의 저항이나 다양한 '목적의식적인' 사회운동 집단의 실천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저항이나 실천이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불만과 잠재적 저항성은 정치적 요구와 이해, 지향, 감수성으로 전환된다(기존의 학술적 개념을 사용한다면, '저항적' 성격 혹은 '기존의 정치에 반하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치성들이 기성정치조직들—정당 등—에 의해 충분히 대의·반영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정치적 불신과 이반(離反)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성정당에 대한 광범한 불신과 이반은 이러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성이 기존의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성'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제도정치의 혁신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수렴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기성 정당으로 수렴될 수 없는 강력한 반체제적인 것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나아가 기성정당이 '반동적'이 될 때 그것은 더욱더 반체제적이고 기성체제를 이탈하는 정치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더욱 극단적인 경우에는 '혁명적' 정치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성은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지구적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 보면 개발독재를 거친 후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전세계의 자본주의와 정치가 겪고 있는 진통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민의 정치적 의사와 제도정치, 운동의 각축과정에서 인민의 정치적 의사

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역의 구성적 과정이 존재한다. 즉 정당과 사회운동이 인민의 정치적 의사의 구성 과정 자체에 역의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도화된 정당들이 수행하는 정치와 사회운동이 수행하는 정치는 상이한 위상을 갖는다. 제도정치는 근대 시민혁명과 다양한 근대화를 통해서 법제적으로 보장받은, 의제적으로 인민의 권력주권성의 현실적 형태로서 주어져있다. 제도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인민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총합(總合, aggregation) 한다. 제도정치는 '수임(受任)받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제도적으로 위임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본원적으로 보면, '인민의 정치'의 '자발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운동의 몫이 주어지게 된다. 제도정치 자체도 인민의 권력주권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때, 권력의 주체로서 인민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것 자체는 '인민의 정치'의 구성적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보자. 사회운동을 인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할 때, 인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의 결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인민의 정치의 한 표현형태로서 그 자체로 정당하다. 제도화된 정치와 '인민의 정치'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대의되지 않은 민심의 공간'에 부분민심을 대의하는 사회운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제도적으로 수임받은 정치는 그 자체가 인민의 '전체 민심(民心)'을 대표한다고 자임할 수 있는데 반하여, 사회운동은 부분민심(部分民心)으로서의 제한성을 갖는다. 제도정치는 선거를 통한 총합을 통해서 전체민심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사회운동은 그 자체가 부분민심이므로 이러한 전체민심을 보장한다는 가정이 성립할 수 없다.

제도정치와 인민의 정치적 의사가 극단적으로 괴리되면, 사회운동이 대표하고자 하는 부분민심이 국민적 민심이 되고 나아가 제도적 총합된 투표민심을 압도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분민심으로서의 사회운동적 정치가 '전체민심'을 대표한다고 하는 제도정치와 각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국민적 민심'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 점



에서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헤게모니’가 개재된다. 사회운동은 스스로를 부단히 전체인심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된 정치와 경쟁하고 각축하며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재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은 그 ‘실질성’에 의해서 인민의 전체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헤게모니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사회운동은 ‘반부패’라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스스로를 일반화함으로써 ‘국민’의 이름으로 제도정당들을 압박할 수 있었다.

이처럼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과정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각축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양자의 상호관계는 다양한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조희연 2010). 한국의 사례는 제도정치의 상당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의 확장속도가 상당히 크게 진전됨으로써 ‘제도정치의 확장과 운동정치의 역동성’이 동시에 유지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제도정치의 확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러한 구·신 모순을 둘러싼 운동정치의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은 주변화되고 제도정치 중심의 민주주의가 현실화된다. 나는 대만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97년 헌정체제가 균열되고 2006년 9월 쿠데타가 재발한 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도정치가 사회적 정치와 극단적으로 유리됨으로써 ‘제도정치 정체-사회운동 정체’의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1>

		민주화과정에서의 제도정치의 개방성과 포괄성	
		제도정치 확장	제도정치 정체
사회운동의 역동성과 이니셔티브	역동적 사회운동	제도정치 확장-역동적 사회운동 유형: 한국 등	제도정치 정체-역동적 사회운동 유형: 필리핀 등
	정체된 사회운동	제도정치 확장-사회운동 주변화 유형: 대만 등	제도정치 정체-정체된 사회운동 유형: 극단주의적 분출과 좌우근본주의: 태국 등

다음으로, 제도화된 정치와 ‘인민의 정치’ 간의 괴리를 내장한 근대민주주의는 개별 사회에서 다양한 역사적 유형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제도정치의 현실적 형상 역시 그러하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은 기본적으로 제도정치의 최종적인 형상을 둘러싼 구성

적 각축의 과정이다. 제도정치가 지배와 국가에서 유기적 구성부분이 되고 중요한 일부가 되는 상황으로의 변화이고, 그런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대립 속에서, 이 제도정치의 형상이 구조화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경로의존적인 과정이 아니다.

앞서 나는 근대 제도정치는 사회와의 갭을 갖는 본원적 괴리를 내장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갭이 커질수록 운동정치의 대중적인 헤게모니적 공간은 확장된다. 당연히 제도정치는 이러한 갭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럴 때 최장집도 이야기하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확장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동원력도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여기서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의 단계변화는 제도정치의 형상을 둘러싼 각축이 유형변화를 동반할 정도로 기존의 제도정치의 형상이 균열과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도정치 형상의 유형변화가 나타날 때 경합국면의 이행을 말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에서 어느 것이 이니셔티브를 갖는가에 따라 상이한 유형이 출현하는데, 이를 제도정치를 중심에 놓고 보면, 단순화할 때, 몇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른바 일본의 1955년 체제와 같이 '패권적인 일당체제'로 제도정치의 형상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미국식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적(liberal) 정당의 경쟁구도로 제도정치가 구조화된 유형이 존재한다. 반면에 유럽형의 경우는—내부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민주주의정당이 집권당으로 존재했던 많은 경우—보수정당과 급진정당(노동당, 사회민주당 등)의 경쟁구도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각각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관계는 다르다. 일본형 유형에서는 운동이 주변화되는 반면에, 미국형 유형에서는 운동의 '의회로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제도정치가 구현되고 정당은 사회적 기반을 가짐으로 제도정치가 사회를 '동원'하는 체제가 존재한다. 정당 지지를 통해서 사회와 인민의 정치성이 표현된다(독재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체제가 정치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동원체제를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형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도정치와 운동의 상호관계가 밀접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정당과 운동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형 제도정치의 형상은 그것이 보수적 패권정당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1955년 체제는 자민당-사회당 체제였고 거기에 공산당이 5% 내외의 지지를 점하고 있는 구도였다. 문제는 자민당 패권체제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이러한 자민당 패권체제에 균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적 공존을 하면 그 지형 자체의 구성적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자민당과 '다원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집권당 위치를 교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연속 패권체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1955년 체제는 내적 동학에 의해서 붕괴하지 않고 사회주의 붕괴라고 하는 외적 계기에 의해서 균열되게 되고, 그것은 자민당 체제의 단기적 균열을 거쳐 자민당 패권체제의 재구조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2009년 일본 민주당 체제로의 전환은 그런 점에서 포스트-1955년 체제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국내 보수 대 진보의 투쟁의 동학이나 민주화의 동학이 아니라 세계화의 동학에 의해서 균열된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제도정치를 통한 지배의 재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수용하는 제도정치의 형상이 출현하고 그것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형상을 갖는 제도정치가 안정화될 것인가 불안정화되면서 균열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구성적 힘과 해체적 힘의 각축에서 결정된다. 즉 민주주의의 확장적 힘(최대화 힘. maximalizing stream. 사회화의 힘)과 제한적 힘(확장 제한적 힘. 제한적 힘. limiting force. minimalizing force. 최소화의 힘. 공동화의 힘)의 각축에서 구성적 힘이—새로움을 더하면서—대중에게 잠재적으로 확대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운동이 이를 현재화하고 기존 제도정치의 현실을 전환하고자 하는—괴리를 극대화하면서—정치적 의지로 전환시켜 낼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각축은 정치적·사회적 각축이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투트랙적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에서 제도정치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적 각축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정치의 형상이 균열·위기를 맞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형상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제도정치의 형상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1)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정당과 주변적 정당 간의 타협적 공존이 존재하며, 2)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고정화되어야 한다(정치에 대한 독점권이 제도정치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내전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제도권내로 갈등이 이전되어—일종의 갈등의 제도화—거기서 전쟁의 의제들이 정치적 가공되고 타협·조정되게 된다). 그래야만 제도정치를 통한 지배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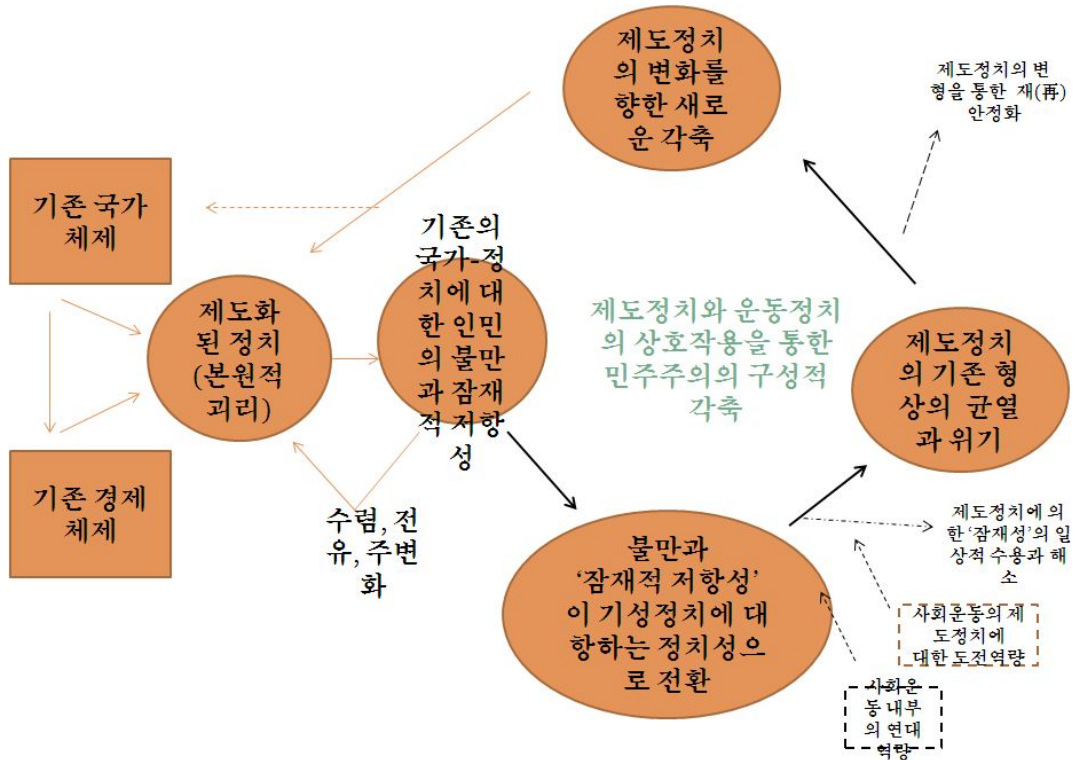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것이 균열된다고 하는 것은 1)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정당과 주변적 정당 간의 타협적 공존이 위기를 맞게 되고(이것은 물론 제도정치 내의 진보블럭이 원심력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2)정치와 비정치의 경계(제도정치의 경계)가 도전을 받고 해체된다(이렇게 되면,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상대화되고 균열을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在野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세력은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새로운 경계를 고정화할 필요가 있다. 현존 권력들이 현존하는 제도정치 내에서의 세력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거리를 확대하여 비정치에 의한 제도정치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들고자 한다. 반대로 운동정치에 의한 원심력이 제도정치 내의 진보적 블럭을 견인함으로써 진보블럭이 제도정치 내에서 지배적 세력과의 타협적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도정치와 연계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 2)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에서의 운동역량의 3측면

여기서 나는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그 향방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은 제도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을 한 단계 높은 방향으로 촉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회운동의 매개적 역할은 3측면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i)사회운동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의 대중적 기반 확보역량이다. 다음으로 ii)이른바 사회운동 부문(social movement sector)내부에서의 상호연대 역량(사회운동 내부관계), 마지막으로 iii)제도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사회운동의 역량(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이다.

<그림 1>



i) 대중의 잠재적 저항성을 현재화된 저항성의 전환하는 사회운동의 매개역량  
 사회운동은 '잠재성의 현재화(顯在化)'의 과정에 개입한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성(잠재적 불만 등)은 제도정치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용되면서 해소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운동이 '잠재성의 현재화'에 성공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제도정치의 기존 지형'을 변화시키게 되면 제도정치의 변화를 향한 새로운 각축이 시작된다.

이는 시민사회와 운동의 관계이고, 이른바 '대중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사회운동이 자기 주제를 가지고—여성의 젠더라인을 따라서, 환경운동은 환경이슈를 따라서—대중들의 잠재적 저항성과 결합하면서 시민사회 내의 대중적 기반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운동의 헤게모니 능력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민사회가 운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갖기 위해 운동은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이는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적 해방'의 과정일 수 있다. 이 과정은 대중들의 성격(peoplehood)의 변화과정이다. 즉 이 과정은 인민의 정체성과 정치적 주체성의 재구성과정이자 변화과정이다.

체제가 대중들의 잠재적 저항성을 폭넓게 산출하는 상황(기대는 높고), 운동이 잠재성의 현재화에 상당히 성공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진보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진보적 흐름이 보수적 흐름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라는 형태로,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라는 형태로 80년대 이후 존재하였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에서, 운동정치의 역량은 제도정치에 대한 '투입' 변수가 된다.

## ii) 운동 내부의 관계역량

민주화과정에서(혹은 모든 역사적 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은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차이를 갖는 '사회운동들'로 정체성의 분화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러한 차이들을 횡단하는 연대관계의 창출능력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그러한 확대에 부응하는 성숙한(차이를 존중하는) 연대성의 실현역량이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운동과 전문적인 NGO, 좌익운동과 신사회운동, 노동운동과 다양한 시민적 운동들 간에 분화와 균열이 출현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저항이 분절화'되지 않고, 지배의 프레임을 위협하는 형태의 주체적인 연대역량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새로운 저항들에 더하여 그들 간에 새로운 연대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기존의 제도정치의 현존상태가 고정화되지 않고 새로운 구성을 향한 각축이 시작되게 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저항성을 담보하는 대중의 직접행동이나 사회운동의 새로운 출현과 역할에 더하여, 그러한 저항성들 간의 새로운 연대성은 민주주의의 한 단계 높은 구성을 향한 각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량은 다양한 저항들의 '상호연결성'이 확대되어 갈 때, 그러한 상호연결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확대되어갈 때 증가될 수 있다.

### iii)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관계에서 운동이 갖는 역량-경계정치 역량

운동이 시민사회에 대중성을 확보하고 내부의 연대성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도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말한다.

대중의 잠재적 저항성에 기초한 운동의 조직화된 저항이 확대되게 되면 기존의 제도정치를 통한 국가와 지배의 재생산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정치에 따른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행동이 되고, 이는 공권력의 투입을 낳고, 결국 지배에서 억압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제도정당의 매개적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토론, 협의, 조정을 하는 과정. 투쟁의 증가.) 국가와 자본에 대한 투쟁이 증가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운동의 충돌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기존의 제도정치 형상의 위기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운동의 제도정치에 대한 도전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민사회의 대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사회의 진보적 활성화의 상황이 유지될 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의 고립화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일본).

이처럼 운동이 제도정치를 위협하는 역량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회운동이 '제도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사회운동이 제도정치에 대한 개입력 혹은 제도정당들을 '정치의 국가화'를 수행하는 '국가장치'로부터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매개장치로 견인하는 역량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이 제도정치 내의 진보개혁적 정당들에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된다.

사회운동 입장에서는 '견인능력'이 되고, 제도정치의 입장에서는 '사회운동정당'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제도정당이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를 위로부터의 동원하는 역량이 발전되어 있고 반대로 사회운동의 제도정치 개입역량은 현저히 저발전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좌파정당들은 상당히 '국가장치'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최장집(2010)이 이야기하는 제도정당의 발전은 정작 제도정치에 집중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진보적 제도정당 자체도 그것이 국가장치화되면, 그것은 보수적 정당과 타협적 공존을 하게 된다(정치의 장이 진보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를 나는 경계정치의 형성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제도정치가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대중/시민사회의 잠재적 저항성을 운동이 어떻게 정치화시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의문시되고 오히려 양자의 경계선 상에 있는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 공신력을 갖게 될 때 이 경계정치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국가화는 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집단과 주변적 집단, 혹은 경쟁하는 집단(여야당)들 간의 '타협적 공존'이 나타나게 되고,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경계'가 높이 쌓아지는 것으로 현상화된다. 경계정치는 '식민화된 제도정치의 관점'에서는 '비정치'일 수 있지만 정치의 주인이 인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정치가 기존 제도정치의 경계선 상에서 그 경계를 교란하고 해체하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치가 제도정치와는 무관하게 주변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에 도전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계정치가 성공적으로 전개될 때, 제도정치 내의 타협적 공존이 어렵게 되고 '진보적인 주변적 정당'은 지배적 정당과 타협적 공존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결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화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대중이 비제도적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면, 제도화된 정치와 그것의 외부에 있는 정치적 활동 간에 경계가 해체되게 된다. 한국에서도 70년대 재야나 2000년 낙선운동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정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활동은 불신하고 정당 외부의 정치적 활동에 신뢰를 보내는 상황 위에서 가능하였다.

사회운동은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경계정치'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제도정치를 매개로 하는 지배/국가의 재생산'이 위기를 갖게 되고 근대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성적 각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운동정치/사회운동이 이처럼 제도정치에 대한 '대안정치'를 '경계정치'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중들/시민사회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정치를 상대화하면서,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를 향한 구성적 각축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경계정치'가 중요한 핵심개념이 된다.<sup>19)</sup> 경계정치는 제도정치와 제도정치 외부의 정치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앞서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는 구성적이



며 제도정치 내부의 지배적 세력은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고정화하며 양자 사이의 담을 높게 쌓고자 하며, 반대로 저항세력이나 제도정치 외부의 세력은 이 고정화된 경계를 해체하면서 제도정치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계정치는 두 개의 흐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경계정치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미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경계가 확연하며 그만큼 제도정치가 비제도정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경계정치의 존재는 현존하는 제도정치의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정치는 기존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는 실천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때문에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경계정치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정치의 사회화'의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은 당연히 경계정치에서도 온건한 경계정치와 급진적 경계정치를 낳는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운동정치와 민중운동의 운동정치의 차이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당연히 온건한 경계정치는 기성정당들의 자기혁신과정에서 더 많은 포섭과 반대로 '초대'의 대상이 된다. 급진적 경계정치는 기성정당과의 관계가 더 대립적인만큼 '대체정당운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87년 이후 '진보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민중운동이 진보정당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경계정치는 단지 대체정당운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감시운동', '압력운동' 등으로도 표현된다. 70년대 재야운동이나 2000년 낙천낙선운동도 중요한 경계정치의 표현으로 본다. 나는 오늘 논의하는 한국의 시민정치 역시 이러한 경계정치로 재의미화하고 싶다.

다음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정치 내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서술한 제도정치 내의 각축이 시작된다.

국가와 제도정치의 특정 지형에 도전하는 운동정치의 발전이 축적되어가게 되고, 이것이 기존의 국가와 제도정치의 위기와 균열을 확대하면서 어떤 행태로든 새로운 변형이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성적 각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정치의 형상은 균열되게 되는데, 이는 1)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정당과 주변적 정당 간의 타협적 공존이 위기를 맞게 되고(제도정치의 진보블력이 원심력에 의해서 견인된다. 새로운 견인). 이와 함께 2)정치와 비정치의 경계(제도정치의 경계)

가 도전을 받고 해체된다(이렇게 되면, 제도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상대화되고 균열을 보게 된다. 이것은 제도정치의 결손과 불완전성, 비대의적 성격이 시민사회와 운동에 의해서 도전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당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여기서 제도정치 내의 타협적 공존의 균열과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의 해체라는 현상은 구체적으로는 현존 제도정치의 구성의 변화를 지향하는 정당이 '사회운동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정치에 의해서 기존의 제도정치의 지형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정당들의 경쟁양식도 변화하게 된다.

진보적 정당들은 기존 제도정치 지형에서 지배적 정당과의 타협적 공존을 거부하고(지형 변화로 그것 자체가 지지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과의 결합을 중시하면서 '사회운동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FTA투쟁이 강화되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반FTA적 운동과 결합하는 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타협적 공존의 정당'에서 '사회운동정당'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제도정치지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지배적 정치세력과의 타협적 공존을 거부하고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정당'으로 나아간 것이고, 반대로 그에 동조하는 변화지향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세력은 기존의 제도정치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계정치'의 창출에 성공하게 될 때,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새로운 변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상호각축하는데, 기존 국가와 제도정치의 지배적 집단에 의한 전략적 실천으로서의 '체제전환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3당합당). 체제 전환사건이 높은 수준의 지배의 혁신인 경우 헤게모니는 상당부분 지속된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정치의 균열이 시작되고 사회운동의 노력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처럼 그것이 계속 제도정치의 일상적 확장 속에 수용되면서, 제도정치와 사회의 괴리가 극단화되지 않고 이것이 각축국면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운동정치와 그것이 담지하는 대중의 불만과 괴리를 투표를 통해서나 정책적 수렴을 통해서 일정하게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사회운동이 제도정치에 도전하는 역량은 자체의 내재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국가, 지배,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정치의 능력 혹은 무능력에 의해서 규정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세력의 '능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오히려 더 크게—사실 짜르체제의 '무능력'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나는 혁명은

혁명세력의 유능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혁명세력의 무능함에 의해서 규정된다.

결국 나는 제도정치와 변동의 역동성이 제도정치 내적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국가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대중의 이반(잠재적 저항성)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정치의 활성화(잠재적 저항성을 반정치적 정치성으로 전환하는 역할)'에서 주어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 체제와 조응하는 형태로 편제되어 있는 제도정치와 균열과 위기(이는 타협적 공존관계의 균열로 나타난다. 이것이 '기존 제도정치'의 '지형' 변화가 된다)가 확대되고, 여기서 새로운 각축과 경쟁이 시작된다.

제도정치와 능력/무능력과 사회운동의 역량 간의 관계는 제로섬적인 관계는 아니다. 운동역량의 절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국가와 제도정치와 사회에 대한 침투역량과 동원역량, 잠재적 모순의 수용역량을 갖게 되면, 사회운동의 대중적 동원력(혹은 제도정치 지형 변화능력)은 현저히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운동과 저항의 역량에 의해서만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의 결과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배세력의 응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는 근대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근대민주주의의 일부로서의 제도정치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시민정치를 일부로 하는 운동정치를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흐름을 운동정치가 담지한다고 보았고 시민정치를 그 일부로 위치지었다. 나아가 정치의 국가화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기존의 제도정치와 형상이 안정화된다고 하는 것은 제도정치 내의 지배적 정당과 주변적 정당 간의 타협적 공존이 존재하고 제도정치와 비정치적 경계가 상대적으로 고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운동정치는 바로 이것에 대항하면서 제도정치 내의 타협적 공존을 균열시키며 제도정치와 비정치적 경계를 해체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를 사회화한다고 하는 점을 서술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운동정치는 '경계정치'로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정치에 제도정치 '독점'을 운동정치가 효과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바로 운동정치의 과제가 존재하고 시민정치 역시 그러한 경계정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참]

## 참고문헌

- 김세균. 1995.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유팔무·김호기 편,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네그리. 2008.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현·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 달, 로버트.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조기제 옮김. 문학과 지성사.
- 백, 백. 문순홍 옮김. 1998. 《정치의 재발견》. 거름.
- 앤더슨, 페리. 1995.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율배반>. 페리 앤더슨·칼 보그 외. 김현유·신진욱·허준석 편역.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 갈무리.
- 앵겔스, 프리드리히. 김대웅 옮김. 2010.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 오페, 클라우스. 1993. <신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 분화 편. 《국가와 시민사회》. 녹두.
- 유팔무·김호기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조희연. 2006. <장외(場外)정치, 운동정치와 ‘정치의 경계 허물기’—비합법전위조직, 재야운동, 낙선운동, 광주꼬문>. 신정완·이세영·조희연 외. 2006. 《우리안의 보편성》. 한울.
- 조희연. 2009. <97년 체제의 ‘이중성’과 08년 체제하에서의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해야 하는 쟁점들을 만들고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토론회 : ‘한국사회체제론’을 다시 생각한다》. 서강대 다산관(2009.11.13.).
-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 조희연. 2013. 《투트랙 민주주의—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으로 본 한국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과정》. 서강대 출판부. 미발간.
- 카터, 에이프릴. 2007.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조효제 옮김. 교양인.
- 폰투스, 요나스. 1995. <그람시와 유로코뮤니즘-계급지배와 사회주의로의 이행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페리 앤더슨·칼 보그 외. 김현유·신진욱·허준석 편역.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 갈무리.
- Aabedi, Amir. 2004. Anti-Political Establishment Parties: A comparative analysis. Londong: Routledge.

- Cohen, Jean and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 Buci-Glucksmann, Christine. 1980. *Gramsci and the State*, trans. by D. Fernbac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p.vii.
- Burawoy, Michael. 2003. "For a Sociological Marxism: The Complementary Convergence of Antonio Gramsci and Karl Polanyi." *Politics & Society*, Vol.31, No.2. June.
- Laclau, E. 2005. "Populism: What's in a Name?" in F. Panizza(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Lester, Jeremy. 2000. *The Dialogue of Negation: Debates on Hegemony in Russia and the West*. London: Pluto Press.

- 
- 1) 여기서 나는 인민(人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인민'은 사람이며 민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한국에서 냉전적 대결과 연관된 뉘앙스를 풍기는 개념이지만, 사람 인(人)과 백성 혹은 민중으로서의 민(民)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근대 시민혁명에서 출현한 새로운 존재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어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전되어온 '인간' 중심주의적 존재의 특성을, '민'은 국민국가(민족국가)의 기본 성원이자 국가권력의 주권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 2)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김동춘·유철규(2008) 참조.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는 슈페터에 의한 고전적 정의와 달에 의한 현대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슈페터는 "민주적 방법이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서 개인이 결정권(power to decide)을 획득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Schumpeter 1943, 269)라고 정의한다. 즉, 민주주의란 통치자가 경쟁적 선거에 의해서 선택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달(Dahl 1989)에 의하면, 다수의 선호와 지지성향을 왜곡하지 않는 자유선거의 실시, 그에 기초한 엘리트 간의 다원적 경쟁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다두제(poliarchy)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는 다두제의 구성적 내용으로 선출된 공직자,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 포괄적 선거권 및 공직 참여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율적 결사를 들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급진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주의적 정의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네그리에 따르면, "대의는 두 가지 모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다중을 통치(정부)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한다. 대의는 연결시키는 동시에 자르며 집착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이접적 종합이다"(네그리 2008, 293).
  - 4) 그람시와 폴라니는 '사회' 자체가 갖는 급진적 함의를 포착했다. 그람시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는 시민사회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시민사회는 계급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를 위협하며 그 결과 사회는 스스로를 능동적 사회로 재구성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맹아를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개념을 재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Burawoy 2003). 따라서 계급과 사회의 관계를 환원적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계급 환원주의가 문제이듯이 사회환원주의 역시 문제이다. 후자는 '국민주의'로 빠져든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계급적 분할을 전제로,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국가와 정치에서 (인)민의 공통성, 지배가 '사회'의 이름으로 헤게모니를 행사할 때 대항 헤게모니의 형성 과정에서 계급적 차원뿐만 아니라 계급의 가로지르는 '사회'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사회'를 파악해야 한다. 라이트(2006)는 자본주의(자본권력)와 국가주의(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와 '사회적 권력'의 강화를 주장한다. 즉, 급진적·민주주의적·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는 또한 이 사회적 권력은 소비에트와 같은 (인)민의 자발적 힘과 시민사회의 강화를 통해서 구성된다고 본다.

- 5) 카터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를 벗어나는 '직접행동(direct action)'이 "사회의 갈등구조가 통상적 정치 채널로 소통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결손' 지점에서 나타"나며,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결손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한 반응"이자 "민주적 자력화(democratic empowerment)의 한 형태"(카터 2007, 32)라고 본다.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이러한 근원적인 결손은 정치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구가 제도정치의 불안정성과 전환을 촉발하는 대중적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적 정치가 대단히 협소하고 지배 집단의 이해나 요구만을 독점적으로 반영할 때 소수자나 하위주체는 민주주의적 정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비제도적 수단'에 의한 정치를 향하게 된다. 사실 포퓰리즘(populism)은 기존의 국가와 정치가 대중의 요구와 극단적으로 괴리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이반,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반체제적 정치'의 가능성과 그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포퓰리즘은 바로 이러한 괴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특정—우익이나 좌익—의 스타일리스트적인 지도자가 전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과열을 낳는 조건은 복수의 요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제도적 체계의 점증하는 무능력과 공존하는 상황이다"(Laclau, 2005a: 11). 이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맥락에 대입해보면, 포퓰리즘 혹은 민주주의는 독재 이후 출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가 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이나 좌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차베스라는 좌익 지도자가 이러한 괴리에서 발생하는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급진적으로 전유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9).
- 6) 급진적 지향을 갖는다고 하는 이론적 논의들에서 근대 민주주의는 '지배의 음모'에 의해 발생했거나 지배의 형식으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계와 동시에 인민의 저항에 의한 '성취물'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성취물로 획득된 진보적 제도들은 이후의 지배의 조건이자 제약, 지배의 틈새와 내적 균열선이 되면서 지배 내부에 '인민이 숨 쉬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별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일정 단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획득된 제도는 지배 내부에서 구성적 긴장으로—저항에 의해 획득된 것이므로—존재하면서 이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의 근거이자 공간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 인권, 시민권 등도 투쟁을 통해 획득된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비록 이후에 자본가계급과 정치사회적 기득권세력이 이를 무력화·형식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부단히 지배의 내적 균열과 모순을 낳는 방식으로 이후의 계급적·사회적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배는 이렇게 (인)민의 저항에 의해서 강요된 '공간'을 지배의 새로운 요소로 재편하고자 한다. 여기 구성적 각축이 존재한다.
- 7) 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비국가적인 자율영역'을 의미하는데, 이 시민사회는 계급적·사회적 균열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균열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동시에 국가에 대립하여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이 외파가 되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을 하는가)이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인민에 의해 구성된다.
- 8) 그럼에도 내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향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자체가 근대까지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투쟁해 얻어낸 획득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근대의 지배적 계급은 이 민주주의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내부적으로 식민화·포획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획이 있음에도—민중의 획득물로서의—민주주의는 그것을 식민화하는 권력들과 부단히 긴장 속에서 존재한다.
- 9) 사실 나는 정치의 경계의 가변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계의 구성적 성격과 가변성을 사회이론적으로 확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억압과 피억압의 이론은 '경계의 사회이론'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로서 경계론을 더욱 확장해보자. 사실 페미니즘을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의 저항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패권적 주체들이 설정하고 고정화된 경계를 상대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경계의 저편에 있는 하위주체들의 '주체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계를 둘러싼 패권적 집단들은 하위주체들의 주체화에 대응하여 경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재생산한다. 186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서양의 근대적인 영토적 경계가 고정화되었고 이를 침범하면 외세의 문제가 되고 이 경계 내부에는 민족국가의 치외법권이 존재하게 되었다. 지구화 시대 우리가 '초(超)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영토의 경계'를 상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변경(邊境)론'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영토의 경계 허물기가 위로부터의 권력과 자본에 의한 경계 재구성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주체화를 통해서 이를 넘어서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의 의학의 경계 역시 가변적이고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것을 제도권화된 의학권력이 이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비(非)의학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민간의학과 경계의학들이 존재한다. 의학과 비의학의 경계는 사회적 것이며 거기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이러한 경계를 둘러싸고 기존의 패권적 집단들은 경계 너머에 있는 민중들의 주체화에 대응하여 경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유지하며 하위주체들은 바로 그러한 경계를 통한 권력적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사회이론 작업은 이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10) 여기서 계급적·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주의적으로 협애화된 계급적 투쟁만이 아니라 광의의 계급적 투쟁, 즉 사회적 투쟁이 정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맑스가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자 간의 계급을 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 집단의 투쟁, 즉 광의의 사회적 투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 11) 오페가 신사회운동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비제도화된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사회운동으로 표현되는 운동적 집단행위들은 제도화된 정치를 유일한 정치로 볼 때 비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을 집단적 의제들을 결정하는 공적 과정으로 볼 때 이는 '비정치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비정치의 정치의 정치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오페 1993).
- 12) 여기서 '의사합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의해서 하나의 금단이 합리적인 것으로 부단히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배 구성적 실천의 결과로서 그것에 대한 현저한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의 금단은 합의가 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익을 현저하게 주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것으로 의미한다.
- 13) 완전한 폭력으로서의 국가와 완전한 동의로서의 국가는 사실 예외적이다. "누드로 존재하는 권력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의적 '강압'"과 "강압적 '동의'"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조희연 2010, 195-6).
- 14) 이 점은 한국의 그람시 논쟁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이 논쟁은 유팔무·김호기 편, 1995, 2부에 수록되어 있음). 나는 한국의 그람시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긍정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과, 헤게모니 확장으로서의 계급적 국가의 극복이 가능한가하는 쟁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과정에서 김세균은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이 "시민사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헤게모니—헤게모니 계급으로 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과 이를 통한 사회 전영역으로의 헤게모니적 민주주의의 무한한 확산—시민사회의 자기규제력의 확대 및 강제력 사용 계기의 배제—궁극적으로는 '정치사회'의 '시민사회'로의 재흡수를 통한 '자기조절적 사회'(그람시의 표현으로는 '조절된 사회')로서의 계급없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김세균 1995, 162)고 보고 이러한 논의가 '정치사회의 시민사회로의 재흡수론'에 다름 아니며, 이는 "이행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극복 및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분쇄 내지는 비국가적 장치로의 혁명적 전환이라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설정될 수 없다"(김세균 1995, 163)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논의가 D. Held나 Keane and Arato같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지양을 도모한다고 하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반면에 김세균은 그람시의 논의가 국가장치의 혁명적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사상되고 순수히 헤게모니의 확장으로서의 혁명을 그람시가 구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론자들은 그람시의 급진성을 우려하고 김세균은 그람시의 개량주의적 성격을 우려하는 형국인 셈이다. 사실 나는 '하나의 그람시'가 아니라 "다수의 '해석된' 그람시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페리 앤더슨(앤더슨 1995)이 그람시의 '이율배반들'이라고 파악한 것이 사실 그람시 내부에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존재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스탈린주의적 해석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현존사회주의가 좌익전체주의로 전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분리의 긍정성을 견지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세균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의 확산으로서 사회주의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유폴코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폰투스 1995 참조), 헤게모니적 민주주의의 확대

로 폭력적 국가기구가 극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광주교문은 폭력화된 국가를 민중들의 자위무장투쟁이 극복했을 때 나타난 '정치와 사회의 일체화'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세균의 문제의식의 핵심인 '국가기구의 혁명적 극복'이라는 과제는 어떤 경로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김세균이 그람시의 논의 속에 이 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람시가 진지전을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혁명과 다른 서구혁명의 특수성을 이론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그람시는 '레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칼 보그는 평의회 민주주의, 레닌주의, 서구맑스주의를 그람시의 세 가지 얼굴로 보고 있다. Boggs, Carl, 1984, "The Three Faces of Gramsci", The Two Revolutions: Gramsci and the Dilemmas of Western Marxism, Boston, MA.: Cambridge: South End Press). 이는 진지전과 기동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진지전을 기동전의 대체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람시에게서—비록 모호성의 여백이 존재하지만—진지전은 기동전의 보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좌파시민사회론의 과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하면서도(이 점에서 '정치와 사회화'는 정치의 소멸이 아니다), 그것이 '정치의 국가화', 그 극단적 형태로서의 국가의 폭력화에 대한 응전 속에서 '정치의 사회화'가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정치사회의 시민사회로의 재흡수가 혁명이 아니다).

- 15) 제주 해군기지의 추진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마을주민 87명의 동의로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발표하였고, 국방부는 6월 제주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였고,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를 수용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찬성을 의결한 주민총회의 무효를 선언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에 서게 되었고, 2012년 4월 총선 공약으로 통합진보당과 함께 재검토를 공약하였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변화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운동정치의 투쟁으로 '타협적 공존의 지형'이 균열되었고(여당으로 국가논리의 내부화라는 측면이 있지만)기진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에 현저한 균열이 온다), 정치적지지 획득 경쟁의 방향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제도정치와 사회적 정치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자가 전자의 지형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 16) 정치의 국가화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제도정치의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민중들이 이에 순응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정치의 사회화는 부단히 기존 정치를 해체하려고 하면서 정치를 사회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민중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태로 정치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 17) 특히 19세기 파리교문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서 바로 이러한 지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파리교문은 실패하였지만 19세기적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상적 시도였다. 맑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발생했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그것에 균립하는' 국가와 정치를 사회와 일체화시키고자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2012)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발생을 사회의 계급적 분열에서 구하고 레닌주의자들이 계급적 분열의 극복과 동시에 국가사멸론을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질서 자체가 사회와 일체화되는 순간 소멸해야 하고 소멸의 필연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18)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내부에서 좌파정당의 의식을 늘리는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정치, 대중의 직접행동, 운동정치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민주주의를 포착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변혁주의는 민주주의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로 파악한다.
- 19) 제도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의 출발점은, 근대민주주의가 내장한 '제도화된 정치'와 '인민의 정치' 간의 괴리(정치와 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권력과 인민의 괴리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즉 근대 이후의 정치에서 언제나 이러한 괴리를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지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얼마나 제도정치에 대립하는 정치성으로 결집해내고 그것을 제도정치에 대한 위협으로 정치적으로 구성해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의 전략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운동은 바로 '제도정치와 인민의 정치'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경계정치(in-between politics)'라고 말할 수 있다.





#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 :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시민정치운동

---

박영선 /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시민이 정치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정치가 시민에게 다가올 것이다.” \_ Ulrich Beck

## 1. 들어가며

시민정치운동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시민사회에 떠돈 지는 그리 오래지 않으나<sup>1)</sup>, 시민정치운동의 함의는 이미 익숙하다. 시민정치운동의 개념이 모호하며 숙성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새삼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시민정치운동의 내포와 외연을 고려하며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볼 때 시민정치운동이란 별도의 장을 배치하여 달리 이해할만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정치운동이 정식으로 호명되기 이전 시민정치운동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정치적 개입, 혹은 정치세력화, 유권자운동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공명선거캠페인부터 시작하여 낙천낙선운동, 당선운동, 공약채택운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정치는 기존의 운동정치의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김보영 2009, 97). 애써 시민정치운동을 기존의 정치운동이나 시민운동과 구별정립하기 위하여 운동의 목표나 자원동원방식 등을 준거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

---

1)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시민정치운동이란 용어는 YMCA에서 발견할 수 있다. YMCA는 2003년에 ‘시민정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만유권자위원회 등의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한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황영민 2011, 247).

다면 분명 세 흐름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정치 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을 비롯하여 시민운동의 다종다양한 정치(적)운동에서 배제되었음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른다.

시민정치운동의 정체적 개념을 피력할 능력이 없는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정치운동은 제도 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었던 혹은 회피하였던 주체들이 정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정치의 바깥에 있던 시민들이 정치의 핵심에 진입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정당이나 정치인,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는 수동적 주체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과정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본질로 이해된다(김민영 2012, 173-175). 그렇다고 해서 시민정치운동이 현실정치의 변화에 참여하는 시민의 행위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동등한 정치적 주권을 보유하는 '공적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사적 시민'으로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성원 지위를 갖는 정치, 인간답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목록과 함께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정치이기도 하다(이병천 2009, 8). 이 때 시민은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의 공적 사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권자를, 정치는 공적 삶을 영위하는 인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연대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집단적 창조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시민정치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권력이 되는 것이며(신진욱 2009, 45), 시민정치운동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권력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정치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시민정치운동조직을 표방한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꿈나라)는 '2012년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정치사상 최초로 시민이 나서서 정당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보고자 만든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은 야권단일정당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시민정치운동은 필연적으로 제도정치와 만나게 된다. 제도정치 바깥에서 운동이 벌어지지만, 그 운동은 제도정치를 향한다. 실제 내꿈나라는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체를 지향했지만,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내걸고 통합민주당의 한 축

이 되었다. 그동안 시민운동단체들이 매 선거시기마다 조직적 내홍을 겪거나, 시민운동 전반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한 세력과 진영으로 갈렸던 이유는 시민운동이 여전히 제도정치와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까닭에 시민정치운동의 실제 입지는 매우 빈약해지고 말았다.

본 글은 시민정치운동의 실체가 시민정치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에 비해 매우 왜소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시민운동의 내부자적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시민정치운동을 살펴보면, 시민정치운동을 현실적으로 추동한 배경과 목표가 시민정치운동의 원리를 제한하게 되고, 그 결과 시민정치운동의 실체는 실종되고, 선거 시기 증폭되어야 하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도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논지이다.

## 2. 시민정치운동의 현실적 배경

### 1) 이명박 정부의 집권 : 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역진

시민정치운동이 기존의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을 넘어 본격적으로 발화한 것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다. 이는 시민정치운동의 등장이 '시민정치를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적 현실'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진욱은 문제적 현실로 이 시대 보수 헤게모니의 원천, 즉 반(反)사회적이고 반(反)공공적인 삶의 양식 자체를 지적한다. 시장과 경쟁, 효율과 업적 숭배의 사회원리가 단지 순수하게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과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현실 말이다(신진욱 2009, 42). 그러나 문제적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해보자면, 이명박 정부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역진 현상이 도처에서 관찰되며, 정치의 퇴행이 목도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가져 온 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역진은 시민운동의 무력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던 촛불집회를 주도했다고 (정부의 오해를 받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국가의 제 정책 분야에서 권력 감시와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오던 시민운동조직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고자 하는 세력들의 과상공세에 거친 반대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방어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전투이건, 큰 전쟁이건 승리하기는커녕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기 어려웠다. 참여정부 당시 자발적으로 제도화를 경험했던 시민단체들은 강압적으로 탈제도화 되어(홍일표 2011, 38), 1인시위에서부터 거의 전투에 버금가는 집회까지 거리의 정치로 내몰렸다. 정치참여의 진입과정이 불가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재정치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민정치운동의 등장은 매우 역설적이었다. 시민정치운동은 대의정치에 답기지 못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이지만, 현실에선 대의정치에 대한 실제적 개입의 도구였다.

## 2) 시민사회의 변화: 시민운동의 분화와 촛불시민,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정점을 기록한 사건이었다면, 2008년 촛불집회는 시민운동이 중대한 전환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계기였다. 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해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바로 시민운동의 분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한국 시민운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요한 분화 경향은 시민운동의 이념과 가치의 정향, 운동 의제, 운동의 성격과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를 한국 시민사회의 1차 분화로 볼 때(조희연 외 2010; 신진욱 2011), 온건 보수적 성격의 시민운동과 진보적 성격의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에 대한 태도를 두고 구별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뉴라이트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극우 보수적인 시민운동의 출현으로 새로운 분화가 추가되었다.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시민운동 내의 이념적 분화는 매우 갈등적이고 적대적이며, 기본적으로 '단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양상은 민주화 과정에서

는 어떤 의미에서 ‘공통의 적(敵)’이 사라짐으로써 그 차이가 독립적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과거 독재 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며, 하나의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운동이 분화되는 것이다. 즉 87년 이전의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가진 거대한 운동(big movement)이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movements in differences)로 분화된다고 할 때(조희연 외 2010, 10), 그 분화는 운동의 목표와 의제에서 차이를 둔 각종 부문 운동의 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으로 분화하는 과정은 시민운동에서 다양한 부문 운동을 생성하게 했으며, 활동 목표와 의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분화는 점차 고유한 정체성과 운동 양식을 가진 독자적 부문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경향은 한 부문 내에서도 미시적인 활동 의제에 따른 파생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다원화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와 운동 의제가 더욱 미시화되고 운동의 주체도 훨씬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 운동의 전문화 경향도 이런 미시적 분화를 더욱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 양상은 운동형 조직과 서비스형 조직으로의 분화이다. 이는 이념적 분화에 비해 갈등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연대 전략이 부재하다면 매우 강고한 블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경향은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자율적 시민들의 등장이다. 시민운동은 그동안 공식적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식 조직들은 전문적인 운동 조직이다. 경실련 창립 이래로 시민운동은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치는 대규모 조직이나 ‘총선 시민연대’와 같은 이들 조직들의 연대체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듯이, 시민운동조직만이 시민운동의 주체인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대 들어 주체적 측면에서 시민운동 내부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가 발생했다. 필자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주체를 특정한 공동체의 성원을 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정형으로 ‘네트워크화된 개인’까지로 확대한 대상으로 이해한다. 선거 국면에서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치파(apoliticals)가 아닌, 새로운 무소속파라고 할 수 있는 비당파(apartisans)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선거, 정당을 통한 ‘좁은 참여통로’를 넘어서 직접적으

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공중'의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원호·송정민 2012, 117).

광장에 모였던 이들은 여러모로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과 대비된다. 낙천낙선운동은 객관적인 운동의 성과 외에 캠페인 사이트 접속수, 모금 규모 등 시민 참여 부문에서 시민운동사의 모든 기록을 새로 쓰게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전문적인 운동 집단의 기획이었다.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운동 전술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시민이 운동의 대상, 즉 객체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촛불집회는 운동의 기획이 전문적인 운동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졌다. 일종의 주체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발적인 시민들에 의해 창안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분출되었다. 2000년에는 총선연대의 정형화된 구호가 시민들에 의해 외쳐졌지만, 2008년 촛불에는 시민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창작한 구호가 집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런 점에서 2000년은 시민운동의 정점이자 동시에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된 것이다.

그 이전부터 응축되었던 시민들의 역량은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시민운동 외부의 지지자에서 시민운동 내부의 참여자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2008년 촛불 이후 시민 스스로 운동 주체가 되었다. 촛불 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운동 역량은 시민운동조직의 운동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내부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 참여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음은 물론 시민정치운동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촛불시민은 정당 뿐 아니라 시민운동을 비롯한 많은 운동조직들조차 제도화된 현실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 3) 시민운동 내적 조건의 변화 : 리더십 교체와 정책 선거의 한계

시민정치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대의에의 배반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내부의 리더십의 교체라는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시민운동 내부의 리더십 교체라는 객관적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하나는 외부자적 시각인데, 이른바 기성정당

수혈론이다. 한국 정당은 나름대로 포괄성,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그 세력들을 편입해 왔다. 그 대상은 민주화운동세력과 386세대였다. 민주화운동세력과 386세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세력은 시민운동세력인데, 이제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 활동을 해왔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다.<sup>2)</sup>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운동가들이 제도정치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웃사이더나 심판자 역할을 벗어나 정치의 중심부에서 정치적 역할이 아닌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민운동 내부의 현실과 맞물려져 더욱 강해졌다. 시민운동이 총선연대 활동을 기점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한국 사회가 전환기라고 할 때 활동가들도 자신의 장래와 조직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3)</sup> 또한 시민운동에서 배출한 리더들의 역량과 공적 헌신을 시민운동 판에서만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과 국회로 진출하여 한국 정치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극적 논리도 있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이를 현실화시킬 일정한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민운동 내부 구성의 변화와 제도정치 참가의 정당성 논리는 십 수 년간 시민단체를 대표하던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정치조직의 구상에 힘을 보태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의명령’이나 ‘진보의합창’에 비해 시민운동 내부의 논의<sup>4)</sup>를 거쳐 창립했던 ‘내가꿈꾸는나라’의 경우 발기제안서에 이름을 올린 인사의 다수는 시민단체출신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수구적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 목소리로 호소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동안의 운동방식으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시민사회운동의 자기성찰”<sup>5)</sup>이 있었다.

2) 《참여사회》 2012년 12월호 좌담 기사 “10·26 서울시장 선거로 본 시민정치 의미와 한국 정치 변동의 기대”에서 강원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이다.

3) 시민의신문. 2003.2.3.

4) 내가꿈꾸는나라는 2010년 7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포럼에서 첫 구상을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산하에 정치개혁위원회를 두고 ‘시민운동의 독자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치기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민정치운동, 정치제도개혁운동 등을 본격화하기로 결의하였다. 2011년 1월에는 시민정치운동 준비모임을 발족시키고, 속도를 내어 2011년 3월 29일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1월 10일 공식 창립했다.

5)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홈페이지. [www.mycountry.or.kr](http://www.mycountry.or.kr)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준 또 하나의 배경은 그동안의 시민운동의 선거대응전술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이다. 매니패스토운동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혁적인 주장을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채택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거시기동안 정책 '실종'을 체감하게 된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시민단체는 정치적 무력감을 강하게 느끼고,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정치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운동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으며, 시민정치운동은 이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렴했다고 할 수 있다.

### 3. 이명박 정부하의 시민정치운동 평가

필자는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평가를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한 조직들이 대부분 정권 교체와 야권 대통합이라는 현실정치의 목표를 내걸었다는 점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가져온 문제적 현실은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활동을 '반MB'로 몰아갔으며, 정치적 대응은 '정권심판'으로 귀결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일상적 활동조차 반정부 활동으로 재단하고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치성이 강화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당연하다. 그야말로 정치가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그 정치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기적 전망에 갇혔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을 거친 후 시민사회는 시민정치에 대한 구상을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상들은 우선 '희망과 대안'으로 매듭짓게 되었다. '희망과 대안'은 시민정치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 활동에 그쳤는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거멀못 역할이라는 그 한정적 역할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정치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희망과 대안'이 야권연대를 정치적 목표로 삼고, 후보단일화협상에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면서

상층 연합 정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 끝에 대중적 차원의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꿈나라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현실정치 목표에 제한되어 직접적인 개입 전략을 주 활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내꿈나라와 같은 시민정치운동 조직은 수구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한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민운동이 일종의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동하는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해왔지만, 정치세력의 실제적 변화 없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렵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강력한 정치세력을 세워 '진보개혁적인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정당적' 운동 방식을 제안하였다.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지를 모아 현실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민정치운동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한 조직들의 활동은 대부분 정당의 자장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독자적인 시민정치운동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내꿈나라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조직한다는 목표아래 시민주체의 활동적 커뮤니티와 지원센터, 커뮤니티와 대중캠페인 조직가로서 시민의원 조직, 시민의원으로 구성된 시민의회와 시민정부 구성 등을 계획하였지만, 고양, 나주, 춘천 등 일부 지역과 청년 부문에서만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을 뿐이다.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과의 소통은 민주통합당 새지도부 선출이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야권대통합 등 정당질서의 재편에 치중되었다. 그리고 내꿈나라에 참여했던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은 혁신과 통합에 이어 민주통합당 창당에 관여하였으며, 민주통합당 입당을 통해 대거 선거에 출마했다. 이 때문에 내꿈나라 같은 경우 '대중적 시민정치운동', '한국판 무브온'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2012년 총선에서 시민운동 출신인사들의 정치적 진출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결국 시민정치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내꿈나라는 소속인사들의 선거운동에 주력하면서 원래 목표로 했던 정당 바깥의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자체 지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대중정치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김민영 2012, 175-181).

이러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시민정치운동을 추동할 세력 혹은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시민정치운동의 지지 기반은 크게 시민운동조직 세력과 촛불시민으로 대변되는 초정당·비당파 개혁시민 층인데, 시민정치운동은 양 지지기반을 자기 세력으로 가져오는 데 실패하였다. 이런 결과는 시민정치운동 조직이 매우 제한된 정치 목표인 정권 교체와 야권대통합에만 국한된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과거 시민운동이 정치(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종의 준거 혹은 규범처럼 작용했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평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민운동조직들과 정권 교체와 야권대통합이라는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합의를 이끌어나가하고자 하는 정치 과정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각각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되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비판적 개입도, 시민정치운동 조직에 대한 지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단적으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시민정치운동 차원에서 독자적인 노선에 따라 정치권에 진출하였지만, 해당 인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은 시민단체의 몫이기도 한 이상한 현실인 것이다. 일본의 생활정치 전략처럼 ‘대리안’을 파견한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촛불시민들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시민정치운동 조직은 촛불시민들과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동관계를 형성하며, 촛불시민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내꿈나라는 발기제안서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로 행동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시민정치운동이 일상적 공간에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는 ‘생활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공동체정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공론정치’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의원, 시민의회, 시민정부 구성 등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행된 것은 촛불시민구출대작전과 같은 일부 대중캠페인과 청년정치수다와 같은 토크쇼, 시민정치아카데미 등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내꿈나라의 확대도 여의치 않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시민정치운동이 표방한 혁신과 창의에 기반

을 둔 운동 모델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이미 시민운동조직에서 시도되고 일반화된 운동 방식이다. 오히려 시민정치운동 조직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활동, 통합정당 선거인단 참여 활동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처럼 보인다.

시민정치운동의 등장에 있어 가장 구속성 있는 요인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라는 점은 시민정치운동이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의 지향이라는 애초의 구상을 예상보다 빨리 포기하게 하였다. 개혁진영이 갖는 보수의 연속집권에 대한 공포도 보수 세력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에 버금가다보니, 현실정치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목표가 무엇보다 우선적이며 시급했다. 정치권력의 독점이 심각한 한국사회이다보니, 정치세력의 교체라는 대의에 사족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87년 이후 성취된 민주주의적 성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정책은 한국 사회 역전의 가능성이 쉽게 현실화되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 개혁의 후퇴에서 발생하는 정치성이 쉽게 저항적으로 활성화된 것이다(조희연 2012, 19-21).

문제는 쉽게 활성화된 그 정치성을 담을 그릇이 부재한 상태, 시민정치'운동'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시민정치운동의 에너지는 제도정치, 즉 현실의 민주통합당의 정치활동에 수렴되고 만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민정치운동 조직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고, 의식적으로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민사회 진영이 야권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 시민정치운동은 출발했던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대의에 배반당한 정치질서를 변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운동이 아닌 시민정치운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대의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에 지난 2년여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시민정치운동 세력이 기존의 정당 구조에서 진보적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민정치포럼이 구성되어 시민운동조직들과 개혁과제를 정식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운동을 계획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정치, 정당 바깥에서 그 활동에 힘을 보태고, 추동할 수 있는 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진입한 개별 인사들의 개인적 역량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남는다.

#### 4. 시민정치운동의 방향

시민정치운동은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기존의 정당정치와 어떻게 구별 정립될 수 있는지 말이다. 물론 상호 정치과정이 실현되는 공간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정치의 구호와 깃발이 잠시나마 나부꼈던 경험을 거친 현재 시점에서 시민정치운동은 시민단체 출신, 시민정치운동 조직 출신의 유능한 정치인의 활약이 아닌 시민정치운동세력의 구축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시민정치운동이란 개념이 그 독자성을 확보하고, 시민운동이나 제도정치와 분별되는 가운데, 활발한 상호정치과정이 이루어지고 연대전략이 현실화되어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필자는 현재 시민정치운동이 지나치게 현실 정치적 목표에 구속되어 시민정치의 원리를 제대로 실험, 구현하지 못한 채 현 정당질서에 편입되고 말았다는 한계를 강조하였다. 시민정치라는 구호와 시민정치운동 조직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비해 시민정치운동의 실체는 빈약했다고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이나, 그렇다고 시민사회에서 시민정치운동의 목표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첫째, 시민정치운동은 선거 시기에 국한된 유권자 운동을 넘어 일상적 차원의 정치운동을 벌여야 한다. '일상적 시민정치'로 펼쳐가겠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정치적 활동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일정에 따라 증폭하기 마련이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상적 차원의 정치운동은 진정한 정치성의 회복을 꾀하

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조희연은 포스트민주화 시기에 87년 이후 20년간의 민주화를 통해서 성취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성,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도전 속에서 허구화된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지향에서 발생하는 정치성, 사회문화적 생활세계 차원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정치성이 있다고 보았다(조희연 2012, 19-21). 필자는 세 번째 정치성에 주목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와 그 경향을 고려했을 때 시민정치운동의 의제가 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욕구, 그것을 실현시킬 사회적 기술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다면 시민정치운동의 일상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당질서와 독립적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의 구성을 기획하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운동 조직이 현재 처한 수준은 어떤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다를바 없다.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정치운동 조직에 전가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시민정치운동의 지지부진은 시민운동이 상당부분 책임질 몫이 있다. 한마디로 '지체'와 '답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 무수한 실험과 실패가 반복되어야 한다.

이 때 온라인과 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운동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2.0, 소셜과 모바일에 기초한 새로운 운동 모델들이 한국 시민사회에도 도입되고 유포되고 있다. 언소주나 82쿡닷컴과 같은 기존의 포털 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동 외에 SNS를 활용한 창조적인 운동 모델이 온라인에 기반을 둔 운동이라면, 특정한 조건을 갖춘 컨퍼런스 개최 방식인 일시적 광장, 단힌 사무실이 아닌 여럿이 드나들며 따로 또 같이 일하는 열린 작업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로서의 복합기능공간, 강제철거나 개발 관련 지역의 이슈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 개입하는 참여공간, 대안적 경제모델을 발굴하고 실험하는 사회적경제 등은 공간을 매개로 한 운동 모델이다. 이들 운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운동이 작동하는 원리와는 대별된다. 참여수준이나 기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한다. 자발성, 효율성, 창조성, 재미가 동력이며 집단지성, 수평적, 비동기적 협업을 특징으로 한다.<sup>6)</sup> 권력에 대한 도전과 지향을 놓지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한국 사회 과제'를 주제로 201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참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역량을 담을 수 있는 정치기획을 통해서 시민정치운동은 시민사회에서 진정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상에서 재미와 감동이 오고 가는 정치기획을 통해 시민정치운동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 촛불 이후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 회의, 나아가 대의제에 대한 한계가 많이 지적되었다. 대의정치에 대한 배신감 토로와 불만은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현실과 기성 정당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에 대한 전반적 부정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시민정치운동은 거의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를 후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거부감,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그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의 기운에 대해서조차 시민들의 고개를 돌리게 하고 마는 것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 선택'은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불구화시키는 것은 물론 참신한 대안적 정치 기획과 실험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정치운동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진정한 시민정치운동의 실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기대는 지난 선거 투표율 상승으로 간접 확인된 바 있지 않은가.

넷째, '진영'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들이 '반反MB 전선'운동으로 단일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 내부의 복잡성이 간과되며, 현재의 정세를 일차원적으로, 전선 정치적으로만 대응하는 문제를 낳아 시민운동이 결국 정치질서판짜기 중심의 운동으로 협소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운동전략 없이 정치 변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통이 가혹한데, 진영적 사고는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조차 정치는 오직 대선 후보, 혹은 예비 후보들의 연출된 동선과 맥락이 사상된 발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처럼 시민정치운동은 야권후보단일화 의제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

내용 중 일부이다.

## 5. 나가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부터 범야권선거연합을 강력하게 추동했던 시민정치운동 세력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기성정치 질서의 판짜기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후단 전술을 고민하려면 후보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시민사회 원로 그룹들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적 태도나, 《안철수의 생각》에 등장한 안철수 구상에 대한 부분적 코멘트가 시민사회 정치 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연합정치를 내세우며, 후보단일화 협상 등 야권연대를 가시화하기 위한 활동만으로 또 다시 시민정치운동을 앙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현재까지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 갈망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시점이다. 시민정치운동이 정치변동의 현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또 다시 현실 정치적 목표에 매몰되어 한 사람의 정치 후보를 내세우고 묻지마 투표를 독려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다.

2012대선을 앞둔 시민사회진영은 어느 때보다도 무력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 비록 대중적 반향이 크지 않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평소 단체의 소임과 역할에 따라 대선 국면에 대응하고 있으나, 매우 한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세의 긴박함과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정치적 역할이 연합정치의 한 플레이어로서 뛰어 드는 거 외엔 없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후보단일화나 야권연대를 실현할 시민사회세력이 약하다는 점도 답답하지만, 대선에 던질 중심 의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공약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이나 전문가 조직에 실패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여겨진다. 무상급식과 4대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보자.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시민단체가 정책 의제를 가지고 정치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경험의 단초가 되었다고 본다. 정책적 쟁점을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대선을 앞



든 현 시점에서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운동이 도전해야 할 핵심과제가 아닐까. ㉞

## 참고문헌

- 김민영. 2012. <시민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 《시민과세계》 21호.
- 김보영. 2009.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 김정훈. 2010.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조희연·김동춘·김정훈 엮음.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 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2).
- 신진욱. 2009. <보수의 진지전, 진보의 혁신, 시민정치의 비전>.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2011.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분절과 분산>. 강원택·장덕진 엮음.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 이병천. 2009.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의 구상: 공화국의 생환과 진보의 재구성>.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 조희연·김동춘·김정훈 엮음. 2010,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
- 조희연. 2012. 《민주주의 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 한울.
- 홍일표. 2011. <한국 정당정치의 변화 가능성-시민적 대의정치의 제도화에 관련하여>. 《2011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중대 선거와 헌법정치》
- 황영민. 2011. <유권자 운동의 진화 : 시민사회의 선거개입 전략, 어떻게 변해왔나>. 《시민과 세계》 19호.

##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의 모색과 활동

---

민만기 /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녹색교통 공동대표

조희연, 박영선 두 분의 발표문을 잘 읽었다.

이른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상호작용하는 투트랙 민주주의에 대한 조희연의 글들은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특성과 한계에 관련해서 한국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온 여러 번의 폭발적인 시민행동 및 재야운동, 낙선운동, 시민운동, 촛불운동의 의미와 작동기제 등을 해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지침이 되어왔다. 최근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진성당원 정당에서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화 등이 논의되고 전에 없이 시민정치가 강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이 주목해야 할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운동정치의 일부로서의 시민정치를 제도정치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정치의 사회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으로 이론화’하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라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시민정치는 스스로를 제도정치, 정당정치와 구별되는 정치로서 정당화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정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현실의 시민정치운동은 박영선의 말처럼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기존의 정당정치와 어떻게 구별 정립될 수 있는지 말이다.

시민정치의 기초를 정의하고 그 작동기제를 해명하는 것은 시민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성립(?) 또는 시민대중과의 결합, 현실적인 의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이다. 제도정치가 파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 시민정치를 포함한 운동정치가 현실적

인 변화를 창출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양극화의 고통에 내몰리고 제도정치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처음 나타난 이후 대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까지 해를 넘기며 안철수 현상(이는 기본적으로 탈정치의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극적인 정치현상이라는 생각이다)을 지속시키고 있음에도 현실의 시민정치운동 세력은 모든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시민대중의 시각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운동(정치) 역량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일 테지만, ‘인민의 정치’라고 하면 특정 집단의 기획과 준비, 역량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조금은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라는 각축에서 역사의 진전과 정치발전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운동정치 활성화 없이 제도정치 혁신 없다’고 해도 결국 정치의 혁신과 발전은 제도정치의 확장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전근대의 신분적 지배자들을 대체한 대표자들의 용인과 제도정치의 개방,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운동정치와 정치의 사회화는 혁신의 동인이며 출발이라고 해도 스스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치를 개선하는 역할로 된다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정치는 개선될 지언정 그 자체(한계)의 부정에 의한 극복은 찾기 어렵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의문은 ‘경계정치로서의 시민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 이론의 비전문가로서 현실의 시민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실천가의 의문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박영선의 글에 나타난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꿈)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에는 감탄스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내꿈의 지난 1년 반 기간의 주요한 모색과 고민과정 및 활동들이 거의 빠짐없이 비교적 정확히 추적되었다. 몇 가지 지점의 판단과 경과에는 해명하고 설명할 욕구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판단이나 주장 대신 간단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정치운동의 실체가 시민정치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에 비해 왜소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것이다. 시민정치가 일부로 포함되는 운동정치는 사실 시민정치를 표방한 단체들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비정형의 시민 개인들과 모임, 네트워크들의 사회활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내꿈의 경우에도 시민정치를 직접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전체 운동정치를 대행하거나 시민사회(운동) 전체의 정치적 전선 형성을 목표로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비정당의 시민정치운동'이라는 깃발과 정치 영역의 시민운동이라는 포지션 설정으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 프레임에 제약되어 있는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여 시민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상징하는 수준이었다.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의미를 일부분 인정한다 해도 정치가 아닌 단지 '정파적 중립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와 방어적 굴레를 스스로 안고 있었고 이는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의 '정치 혐오증'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돌파가 필요한 것이었다. 사회변화에 대한 참여 에너지를 담지하고 있으나 각 부문의 활동으로 특화되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합되지 않은 시민들의 조직화라는 과제도 상정할 수 있고, 운동의 총체성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필요와 역할분담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내꿈의 정식 명칭이 '시민정치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인 점에서도 과도한 대표성과 정체성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이는 실제 주체 역량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다). 전체로서의 시민정치운동의 수행이나 전선을 자임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정치운동의 함의' 실현에 미흡하다는 대상화된 평가는 성립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적이라면 사회운동의 역동성과 시스템의 문제, 시민사회의 (연대)역량에 대한 지적과 같이 되어 의미있는 초점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시민정치운동을 현실적으로 추동한 배경과 목표가 시민정치운동의 원리를 제한하게 되고, 그 결과 시민정치의 실체는 실종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도 무력화되는 상황 발생—'이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먼저 당시 사실들의 여러 측면을 알 필요가 있다.

### **총선까지의 내가꿈꾸는나라 활동과 평가**

내꿈은 지난 2007년 이후 3~4년 동안 지속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정치운동 모색을 수렴하고 '비정당으로 정당정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정치혁신 요구를 조직화할 수 있는 시민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3월 미국의 무브온, 티파티와 같은 대중 정치참여를 염두에 두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지역간담회, 언론사 공동기획의 정치담론 및 의제 제기활동, 온라인 캠페인과 이벤트, 청년정치조직 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시민단

체 출신 전·현직 인사들의 참여로 지역조직을 결성하면서 대중적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망을 갖는 시민정치조직을 지향하였다.

지난해 5월 이후 총선을 1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준비정도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 수권적 대안정당론이 대두되면서 내꿈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1차 논쟁이 발생하였다. 시민 주체의 시민정치운동이라는 본연의 기본 과제와 함께 MB집권 이후 무너진 시민적 가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수권체제를 구축·정비하는 것이 우선하는 주요과제이고 이는 정당구조의 개편과 혁신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모아졌다.

이러한 1차 논쟁 이후 내꿈은 다른 시민정치운동 단위 및 주요 활동가들과의 통합 기획을 모색하는 2차 논의를 진행하였다. 시민정치운동 본연의 활동과 대중적 정치조직 건설과 수권대안정당 건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중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수권대안정당 건설이라는 과제에 동의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독자적 가치와 세력을 우선하는 방법론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 2차 논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내꿈은 시민정치운동의 통합적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화됨으로써 운동 동력의 손실을 가져와 이후의 정당 및 정치세력들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는 데서도 한계를 노정하였다. 8월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 에너지를 일정하게 조직하고 있던 친노진영 일부와 연대하여 '혁신과통합'을 창립,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정치혁신운동과 통합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내꿈의 자원과 동력 부족이라는 한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혁신과통합의 중앙 및 지역조직 건설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기대는 유보되고 혁신의 동력은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한계 속에서도 정치일정과 그에 대응하는 실천은 이어졌고, 성공과 실패를 불문하고 처음 시작하는 시민정치운동의 경험으로서 축적되었다. 10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선거캠프의 각 부문에 직접 결합하였고 박원순 팬클럽을 주도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시민승리를 일구어 냈다. 12월에는 혁신과통합의 주도로 시민통합당이 창당되었다. 원탁회의에는 남윤인순 지도위원 등이 참여하여 야권연대와 야권단일후보의 성사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꿈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해 나갈 정치세력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시민정치인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월 지도부 선거에서는 뼈아픈 실패를 겪었고, 친노진영과의 1차 동맹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지만 좌절하지는 않았다. 2월에는 시민정치인 예비후보들을 소집하여 '2012 희망의 정치학교'를 개최하였고 그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혁명선언'을 발표하는 등으로 시민정치의 비전과 공약을 수립하고 정체성과 구심을 형성하면서 공천 및 선거에 대비하였다. 약 30명의 시민정치인들이 도전한 이번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10명 정도의 시민정치인이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하였다.

총선까지의 활동 성과라고 한다면 야권통합 및 야권연대의 추동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시민정치운동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내꿈은 내부 논의의 결론에 따라 조직의 정치방향을 정하고 자체 집행력으로 일관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와 성찰을 통해 다음으로 나아갈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정한 인원의 의회 진출을 실현하여 시민정치 원내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원내와 원외의 시민정치인과 시민사회 결합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최소 구성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정당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정당정치와 접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처하여 도전과 실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와 경험을 확보하였다. 부수적으로는 총선 전 '희망의 정치학교', '시민정치혁명선언'을 통해 시민정치인들의 최소한의 정체성과 비전의 준거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총선 후 '총선 보고 모임', '출마자 합동 워크숍', '시민정치인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원내외 시민정치인들의 정체성 확인과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연대협력의 틀을 모색하면서 원내 진출그룹과 원외 시민정치인, 시민정치운동 3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뼈아픈 실패와 한계도 있었다. 무엇보다 야권통합과 연대의 과정에서 혁신의 추동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 혁신과통합 창립을 통해 대중적 정치혁신운동과 통합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내꿈의 자원과 동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해 혁신과통합 중앙 및 지역조직 건설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저조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유보되고, 혁신의 동력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것에는 대중적인 시민참여를 추동하는 독자적인 시민정치운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치혁신을 지속적으로 추

동할 시민세력의 조직화와 시민사회와 시민정치운동의 단합 및 통합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시민정치운동의 대중적 동력을 결집하지 못하였다. 수권정당의 건설·정비라는 주요과제의 수행에 매몰되어 활발한 시민참여를 추동할 대중사업과 시민정치교육사업을 포함한 일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생활정치 활성화와 대중적 시민정치운동 가시화라는 기본과제를 소홀히 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치방침 관련 1, 2차 논의 과정에서 내꿈은 시민정치운동의 통합적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화됨으로써 운동 동력이 일부 손실되었고, 이후의 정당 및 정치세력들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는 데서도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원·내외 시민정치인들의 정체성 형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집단의 결속력과 구심력도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위와 같은 평가(총선 후 개최된 내꿈 2차 총회의 사업평가문)에서 자인하듯 박영선의 문제의식과 '독자적인 시민정치운동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은 개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의 지향이라는 애초의 구상을 예상보다 빨리 포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해도 몇 가지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애초의 시민정치운동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본과제로 삼되, '수권정당의 형성'이라는 주요과제를 설정한 것이지만 두 개의 과제 중에 주요과제에만 매달리게 된 것은 주요과제라는 설정 자체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지만 여력의 부재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과제에 모두 인입되어 없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없는 딱 한 개의 실천력 외에는 가용한 자원이 없었다. 시민정치운동의 독자적 가치와 세력을 우선하는 방법론을 주장한 자원들은 논쟁 이후 내꿈에 남아있지 않았고 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이 야권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지적은 내꿈이 시민사회와의 연계 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출범했다는 점에 비추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수권정당의 형성'이라는 내꿈의 정치방침은 내부 논쟁 외에도 그 전후 시기에서 광범한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중첩되었던 것이었고 특히 2차 논의과정에서 내꿈은 다른 시민정치운동 단위 및 시민사회 주요 활동가들과의 통합 기획을 모색하였고 방법론 외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 형성되기도 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합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내꿈이 소통과 통합적 흐름의 형성을 시도하지도 않거나 명확한 반대 속에서 독자 노선을 가져 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당시 혁신과통합이나 시민사회 외부의 평가에서 내꿈은 단지 시민사회의 일부가 참여하는 것 일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논쟁의 부산물 등(기타 알 수 없는 이유)으로 인한 내꿈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리두기와 불참, 비토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평가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극복을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시민정치운동은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선거 시기에 국한된 유권자 운동을 넘어 일상적 차원의 정치운동을 벌여야 하고, '정당질서와 독립적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의 구성을 기획하는 정치기획이 필요'하기도 하다. 아울러 '정치의 효능감을 제고'와 '정치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고 '진영적 사고에서 벗어나야'하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는 바로 대통령 선거의 시기이고, 정치는 선거국면에서 가장 인민의 각성과 행동을 촉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꿈은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 활동으로 유권자 시민정치교육사업과 회원 사업, 국회에 진출한 시민정치인들과 시민사회와의 매개를 통한 시민 정책의제의 형성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대선 캠페인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진영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현실의 왜곡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전과 구심이 없이 사분오열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구보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간층부터 서민 민중들까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온갖 실정과 극에 이른 양극화의 고통 속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은 아직 뚜렷한 희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보수정권의 연장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와 양극화라는 객관적인 사회 현실과 바닥 민심은 정권교체와 새 시대의 개막을 원하는 것이지 그 역은(보수정권의 연장을 원하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제도정치와 정당정치의 한계와 야당의 무능으로 왜곡된 정치구도를 바로잡아 변화와 승리구도를 확립하려는 노력 역시 운동정치의 일부로서 시민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질서의 판짜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쟁점을 정치의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과제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0%을 상회하는 보수진영의 응집력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쪽에서는 정치와 정당의 불신과 조급한 소아병적 패권주의, 자멸적 혼란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각 세력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고 20~30세대와 비정규직, 실직자, 농민, 소수자, 서민, 중소기업, 여성, 환경, 평화세력들의 이슈를 수렴하여 사회세력의 연합과 다음 정부의 공동 과제를 선명히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독점(Anti-Trust)의 기치로 노동자들과 서민, 흑인들의 연합을 형성하여 개혁의 기반이 되었던 1930년대 이래의 미국 뉴딜연합처럼 반독점의 정의와 복지를 기치로 시민대중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제가 필요하고 정치 쟁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

# 시민정치의 '두 요소', '시민'과 '정치'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

---

김윤철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 두 가지 물음

'근원적 물음'을 던지려 한다. 특히 우리가 시민정치라는 이름으로 '가정 (assumption)'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왜 그토록 강렬한, 지겹도록 반복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조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늘 기존 정치의 '한계'와 그것의 '극복'에 대해 논해야 하는가? 왜 정부, 의회, 선거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정치는 늘 문제인가? 시민정치는 정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인가? 난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해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참여 유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정치를 논함에 있어 이미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난 바로 그것이 흔하디흔한 유행어, '성찰'의 '진짜 정의(definition)'라고 본다. 즉 성찰은 '머리의 조아림'과 '몸 낮추기'가 아니라, 근원적 물음 던지기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길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걸음을 멈추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찾아 '시민정치라는 정글' 속에 들어와 길을 잃었다면 혹은 찾고 있는 중이라면, 시민정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 시민정치의 시민은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그들의 정치는 무엇인가?

## 2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제도정치의 밖? 그럼 시민=비정치적 주체? 대체로 시민을 비제도정치 영역(비정부, 비의회 등)에 머물고 있으면서, (제도)정치화될 수 있는 혹은 정치화되어야 하는, 정치화되곤 하는 주체로 가정(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은, 그것이 시민정치의 목적을, 나아가 이념과 전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

하지만 시민을 (제도정치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자 하면서도) 제도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위치규정하면, 그래서 그것의 밖에 위치짓게 되면, 시민'정치는 제도정치 밖에 있으면서 제도정치 안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혹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제도정치의 밖에서, 제도정치를 압박해, 제도정치를 혁신하는 '영향의 정치'로 귀결. 그래서 영향의 정치가 한계 있다 판단되면, 안으로 진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대응을 가져온다. 아니면 진입은 제도정치에 포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거나 혹은 제도와 비제도의 '경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또 다른 '긴장의 부여'와 같은 식의 대응을 가져온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진입도, 거리두기도, 긴장의 부여도 모두 성공적이지 못한 현실이다.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문제.

첫째,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직도 제도정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논해야 하는가? 진정 지난 5년은 제도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역진을 의미하는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5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가?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와 의회에 대한 비교관점에서 보자. 언제, 누구에 의한, 어떤 진전 혹은 역진이 있었는가. 설사 역진이 지난 5년(만)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의 원인이 과연 제도정치 영역 안에(만) 있는가? 가령 재벌의 횡포 등 승자(강자) 독식의 문제가 과연 제도

정치 영역의 문제인가? 오히려 문제는 '비제도정치 영역으로서의 —사실은 그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회'에 있지 않은가. 약자보호 혹은 약자의 주체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소모적인 이념갈등과 양보없는 이해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정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그것의 이유를 비제도(사회)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제도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회의적 언사'가 사회역량을 강화해 제도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다시 묻자. 제도정치를 얼마나 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난 오히려 사회 영역의 문제—아래에서 '권력격차'라고 표현하는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정치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자율성과 효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진 상황, 그래서 피동적-반영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 정당위기, 정부위기, 의회위기 등등은 단지 나쁜 주체의, 나쁜 퍼포먼스의 결과가 아니다. 사회에 대해 더 이상 힘을 갖고 있지 못한 혹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제도정치 한계의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말과 소통 환경의 변화 —무엇이든 즉시 드러내버리는— 에 따른 대의제와 선거정치 자체의 한계가 그것을 가져 왔다. 정치인은 더 이상 자율성 발휘를 위한 '숙고와 침묵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제도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것은 나쁜 놈이, 혹은 민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좋은 놈이어도, 민의를 반영하려고 해도 지금 이상의 방법과 수단을 가질 수 없는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버리는 말과 소통의 환경'에 노출된 대의제 자체의 궁지.

둘째, 제도정치 혁신이 여전히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정치를 논하게 하는 배경이라면, 시민정치는 이전의 '(시민)운동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시민정치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왜 새롭게 (시민)운동정치가 아니라, 시민정치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즉 목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 새로움은 어디서 찾아져야 하는가? 주체의 새로움? 전략의 새로움? 그런데 주체와 전략이 진짜 새로운가? 촛불 시위자, 초정파, 무당파층의 존재가 정녕 새로운가? 아니면 그들의 실천양식이 새로운가?

이 물음이 시민정치 역시 새로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정치는 —실제 새로와도— 새롭게 조명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난 —누구인지 따져 묻겠지만— 시민은 제도정치 권력의 영토 속 깊고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터와 배움터 모두 제도정치 권력의 영토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맺는 ‘끈’의 대부분이 바로 그 제도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나라 걱정’, ‘애국’, ‘사회봉사’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대체로 권력영토 안에서 좀 더 넓은 혹은 좀 더 노른자위를 차지하려는 쟁투에 불과하지 않은가. 지금 한국에서 배움터만큼 제도정치 권력의 소재에 따라 휘청거리는 것이 또 어디 있던가. 교육문제의 해결을 교육감 선거를 통해 풀어보려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성인’의 관점에서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5년, 4년, 2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의 선거정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시민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제도정치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즉 제도정치와 늘 링크되어 있지 않은가. 제도-비제도로 구획할 수 없는. 오로지 이론적 편의를 위한 용어의 차원이 아니라면. 특히 제도정치영역을 행정부와 의회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난 시민정치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위치를 묻자면, 제도 혹은 비제도와 같은 공간 구획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비제도를 통틀어 시민이 권력배분의 질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상(위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이 아무리 ‘thing’이 아니라 ‘relation’이라고 해도, 시민이 얼마나 크고 작은 힘을 갖고 있는지-작용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시민이 제도정치 영역 안에 혹은 그것에 ‘링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고유의 권한, 즉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혹은 형식적 보유로 그칠 뿐이라는 것. 혹은 권력격차의 극심함—권력의 빈곤함—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즉 결정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전담하는 희생을 강요받고 실제 희생당하고 있는 매우 ‘자명한’ 현실을 상기하게 된다.

바로 이 문제. 권력격차의 문제. 시민정치가 해결할 문제, 즉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권력격차의 해소. 권력의 평등이지, 자기와 떨어져 존재하는, 제도정치라 불리는 정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3. 시민은 누구인가?

시민정치를 논함에 있어, 그것의 이름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시민'을 이미 존재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누군가로 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은 보통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적 가치의 법적, 정치적 구성물인 헌법에 의해 주권자, 참정권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위임해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의 담지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사회계약론의 관념에 의거, 시민을 법적으로 추상화한 것의 결과이다.

그럼 시민은 누구인가? 그래도 어쨌든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이? 정치인도 아니지만, 운동권도 아닌 '민간인'? 일단 시민정치가 주체의 측면에서 운동정치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려면 (운동권도 시민이긴 하지만-민간인은 아닌) 비정치인, 비운동권으로 상정해야 할 것. 그럼 촛불 시위 참여자? 서울시장 보선 모바일 투표 등에서 정당 후보가 아니라, 초정파, 무당파층으로서 시민후보를 선택한 이들?

내가 보기에 시민은 이미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비제도를 통틀은 권력의 배분 질서에 위치지워져 있는 이를 가리킬 때조차 그는 시민이 아니다. 그는 단지 근대 민주주의 체제의 법적 담론 질서에서 '시민'이라고 지칭되는 '개인'일 따름이다. 그것도 셉텔의 말처럼 —롤스의 '의무론적 윤리를 중시하는 초월적 자아'가 아니라— 이러 저러한 관계망 속에서 연고적 자아를 갖는 존재. 그래서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정체성을 부여받는 주체이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이자 누군가의 적이다 등.

촛불 등등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민정치가 잘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은 존재 그 자체로 혹은 늘 존재하는 주체형태가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촛불시위 참여자, 초정파, 무당파 유권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이러 저러한 형태로 '발현'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시민은 '상황의 조성-개인의 자각-개인 혹은 중간집합적 행동의 결단-대규모 집행행동'이라는 과정에서 개인이라는 주체 위치를 넘어설 때 찾아볼 수 있는 '발견적' 주체이다. 보통 '형성적' 주체 혹은 '만들어지는' 주체라고 일컬어지지

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간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어떤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야 할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는 주체, 그런 인간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서로에 대해 '착한 친구'가 되는 그런 때. 이런 의미에서 시민은 '서로 주체'이다.

이런 관점이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시민관에 '규범적'으로 부합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자(사상의 규범에는 몰라도 역사에는 부합되리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그러한 성격이 시민정치의 활동양식을 비롯해 존재양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처럼 조직을 꾸리고, 구성원을 조직하고, 통일된 이념과 정책을 만들어 집합적으로 표방하는 등등이 불가능하다는 것. 왜 기존의 정당 정치 세력에 대비되는 시민정치라는 이름의 독자대오가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새로운 말과 소통의 질서에서 마치 새로운 '시민'이 만들어진 것 같은 듯 보이다가 금세 소멸하거나 다른 것 —'스마트 몸'인 것 같다가 말과 소통을 부패시키면서 결국 시민정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는 '어글리 몸'—으로 '변질' 혹은 '변형'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시민정치에서 시민이라고 부르는 이들, 그들이 이러 저러한 언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 제도정치의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점잖게 다시 개인으로 원자화되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되는 이유도.

그런데 문제는 그리 해서 —개인으로 원자화되어서는— 권력의 배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홀로 주체로서의 인간은 허약하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 따라서 시민을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규범에 따라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라고 위치진다해도 그 위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집합적 주체가 될 때에만,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로서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정치가 —형상을 잡아내는 것에도, 그것을 위해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에도,

또 실제 그 이름으로 무언가 행동하고 성과를 얻어내는 것에도— 이러 저러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정치로 진입했기에(정권교체에 집중했기에), 거리를 두지 못했기에, 경계를 지키는 긴장을 유지하지 못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또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초당파, 무정파를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시민에 대한 가정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격차가 삶의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집합적 주체로 발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늘 그것을 자각할 수도, 자각한다 해도 집합적 주체가 쉽사리 될 수 없다는 것. 집합적 주체가 된다 해도 그것의 지속성은 강고하지 못하다는 것. 시민정치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색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난제의 해결이 지금의 시민정치에게 부여된 과제라는 것이다.

#### 4. 시민정치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근원적 물음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고 해서 결론 역시 근원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민정치의 출발점, 시민정치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할 때에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실제 가능하고 효과적이나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민정치의 정치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물음을 통해 —에둘러 말하는 방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말하고자 했던 —잠정적으로나마— 시민정치의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나는 시민정치는 ① 권력격차, 권력의 빈곤으로 인해 온갖 정치, 사회적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권력약자층’이, ② 제도-비제도 등의 구분을 넘나들며 ③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④ 개인을 넘어 시민이라는 집합적 주체로의 발현을 통해 ⑤ 대표의 선출이 아닌 직접적 통치에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⑥ 국회 보다는 행정권력, 그것도 우선 차지 가능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⑦ ‘시민정부’의 구성과 운



영을 통해 권력을 신장해가는 실천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민통치성을 구현해가는 실천'이다.

이러한 정의에 바탕해 현실 가능한 수준과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이나, 즉 시민정치가 말하는 정치의 내포가 무엇이나와 관련한 물음 형식의 답—동시에 우리가 함께 짚어보았으면 하는 문제—은 다음과 같다.

1) 권력격차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연고적 자아를 갖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적) 자각—집합적 주체화—지속성 등을 (상대적으로 더 오래 혹은 빈번히) 갖게 함으로써, 권력의 공평한 보유자가 되게끔 할 것인가.

2) 이때 주목해야 할 것. 정당정치, 의회 정치의 기능부전과 불신. (지역) 행정권력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과 생활밀착성 (지방의회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정치역량들). 가시적 효과의 도출에 더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시민개방적 공간을 더 쉽고,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참여예산 등 포함하여)

3) 박원순 서울 시정부 구성과 운영의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으로서의 시민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좋은 사람 뽑은 것? 거기서 더 나아갈 요소는 없는가? 시민통치성 진작에 영감을 주는 것은 없느냐는 것.(타운미팅, 시민캠프, 시민 1일 시장 등등) [㉠](#)

##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 토론문

---

이철희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1. 소회

- 통상적인 분류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언저리에서 '잔뼈'가 굵어 시민정치나 운동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민정치의 영역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쭙잖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두 발제문을 통해서 새삼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민정치에 대해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이해보다 정치적 효용을 먼저 생각해온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전략가'인가를 새삼 깨닫게 됐다.
- 학교 다닐 때부터 최장집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열심히 그 분의 책을 읽고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 백낙청 선생님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고, 책도 정독했다.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인지 몰라도 서로가 다른 입장에 대해 귀 기울이면 좋겠고, 설사 일부 대립적인 대목이 있더라도 '적당한 차이'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다.
- 이런 소회를 밝히는 이유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시민정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기 위해서다. 김어준이란 친구가 자신의 책에서 '무학의 통찰'이라는 말을 하던데, 내게는 그런 것도 없다. 따라서 정당정치를 좀 아는 자가 시민정체에 대해 느껴온 바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적절한 자세라고 판단한다.

## 2. 단상

- 정당정치의 영역은 그것대로 있고, 또 시민정치나 운동정치의 영역은 또 그것대로 존재하면 될 터이고, 문제는 둘 간의 관계다. 돌이켜 보면, 운동정치의 영역이 어떤 이름으로 존재했든 양자가 파트너십을 갖고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가 일체화되거나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정당정치가 잘하면 시민정치가 필요 없다는 논리나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시민정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드리는 말씀이다.
- 87년 6월 항쟁 때 국본이라는 전선조직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일궈냈다. 민주진영의 역량을 거의 총집결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정당정치가 사실상 독점했다. 그 결과 6월 항쟁, 더 크게는 민주화운동의 지향과 목표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제도와 입법을 다루는 정당정치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의 뉴딜에서도 초기 뉴딜입법의 대부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는 형태로 보수가 저항할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상원의원 Robert Wagner의 노동법 개정안이었다. New School의 David Plotke에 따르면 뉴딜체제는 행정권력이 주도하고, 정당이 뒷받침해서 구축·유지된 것이다.

- 민주당 질서(order)의 "핵심은 national state, a leading party, major interest groups and movements 간의 powerful triangle에 의해 형성됐다."(Plotke, *Building a Democratic Political Order*) 덧붙이면, 이 질서를 이끈 골간은 2~300명의 당·정 내 주요 인물이라고 한다.
- 시민정치나 운동정치가 사회적 과제나 균열을 의제화·쟁점화시키는 역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정당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 아닌가. 물론 시민정치가 입법의 단계에도 참여해 발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정치나 운동정치의 노력과 성과들이 온전하게 구현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시민정치나 운동정치의 한 부분으로 '좋은 정당·정당체제' 만들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한 예로,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 이후에 정당정치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듣지 못했다. 더 나빠지는 걸 막은 것으로 자위할 수 있겠으나, 낙천·낙선운동이 가졌던 과급력을 생각할 때 그 성과는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정당정치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당정치에서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만 유권자들과 제한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해 놓은 선거법 때문이다. 이런 선거법으로의 개정은 의원들이 '명청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당의 관점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담합으로 빚어진 측면이 더 크다. 지역구 단순다수제를 '사실상' 고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시민정치가 추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 박영선 실장님이 지적한 대로 "시민정치운동은 제도 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유도 배제되었던 혹은 회피하였던 주체들이 정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 그런데, 배제되었거나 회피되었던 주체들('시민공중')의 정치 참여 통로로서 시민정치를 설정하는 것이 이들이 정당의 '사회적 기반'으로

편제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 박 실장님의 다음 평가에도 공감한다. “무상급식과 4대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켜보자.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시민단체가 정책 의제를 가지고 정치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경험의 단초가 되었다고 본다. 정책적 쟁점을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운동이 도전해야 할 핵심적 과제가 아닐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무능만큼이나 시민정치도 무력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 시민정치가 안철수현상의 등장을 계기로 이번 대선을 시민정치 중심으로 펼치려고 한다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창작과 비평》에서 쓴 글에서 밝힌 바대로, 시민정치는 후보단일화나 야권연대의 운영 등에서보다 어젠다 세팅이나 아래로부터의 투표운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조희연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잠재적인 저항성이 현재화된 저항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체제의 모순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희생자집단의 저항이나 다양한 ‘목적의식적인’ 사회운동 집단의 실천”이라는 대목이 있다. 저항성을 정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없는지 궁금하다.
-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는 샤츠슈나이더의 갈등의 사사회와 사회화 개념들을 연상하게 한다.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당이 정치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바는 없는지가 궁금하다. 정당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정치의 사회화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다.
- 운동정치 활성화 없이 제도정치 혁신 없다. 조 교수님의 이런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운동정치가 생각하는 해법이 제도정치의 해법과 다를 때 반드시 운동정치의 우선성을 전제로 해야 하나? 대중적 열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해법이 사회적 역관계의 실질적 개선이나 제도정치를 더 위축시키는 쪽

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 않나?

- 정당정치나 제도정치는 선거라는 기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걸러지고 틀 지워지는 데 반해 시민정치나 운동정치는 그런 기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치나 운동정치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직접행동이 아니라 일상적 형태로 전개된다면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교정되고 수정되는 것인지?

### 3. 기대

- 정당정치의 무능과 무기력, 기득권 지키기를 지켜본 입장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당의 기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정당정치의 정당성을 외치기보다 시민정치의 등장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얼마 안 되지만 지칠 대로 지쳤다. 지금의 민주당 꼴을 보면 더 더욱 그렇다.
- 시민정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할 정도로 잘 몰라 답답할 뿐이다.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당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면, 시민정치는 빨리 집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가 양 날개를 형성해야 '정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달라지게 해야겠다는 효용성과 투표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가 달라져야 대중의 삶이 달라진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와 달리 포부와 언명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능해지기를 정말 기대한다. [참]



##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본 안철수 현상의 가능성과 한계

---

정상호 / 서원대 교수

### I.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 발표문에 대한 논평

#### 1. 박영선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운동 :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시민정치운동'

##### 1) 왜 '시민정치'가 아니라 '시민정치운동'일까

###### ○ 박영선의 정의

- “시민정치운동은 제도 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었던 혹은 회피하였던 주체들이 정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시민이 정당이나 정치인,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는 수동적 주체에서 벗어나 끊임 없이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과정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본질(김민영)”.

- 사례 :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꿈나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 ○ 비평

- 정의와 사례를 보면 시민정치운동의 개념이 시민단체 중심의 정치(개혁)운동. 정치분야의 시민운동으로 협애화. 자칫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 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역진→ 시민단체의 '재정치화'라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단체중심의 해석.

## 2) 시민운동정치의 배경 : 한국의 특수성만 주목한 것은 아닐까?

### ○ 배경

-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자율적 시민들의 등장/ 촛불시민은 정당 뿐 아니라 시민운동을 비롯한 많은 운동조직들조차 제도화된 현실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
- 시민운동 내적 조건의 변화 : 리더십 교체(역량 성숙)와 정책 선거의 한계(무기력)

### ○ 21세기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

-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다중(multitude)의 등장

## 3) 평가와 대안에 동의, 그러나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의 위로부터의 사고

- 이명박 정부하의 시민정치운동 평가 : ① 정치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기적 전망에 매몰: 정권 교체와 야권대통합이라는 좁은 목표와 활동방식의 한계 ② 상층연합에 치중 > 독자적인 대중정치운동 프로그램의 빈약
- 대안 ① 선거를 넘어선 일상적 시민정치 ② 정당질서와 독립적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의 구성을 기획하는 정치적 기획 ③ 정치적 효능감 제고 / 대선에 던질 중심 의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공약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이나 전문가 조직에 실패하고 있는 이 현실.

### ○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정치를 해석할 필요

-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자율적 시민 + Web 2.0/ SNS의 특성/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제도화된 대의적 매개를 거부하고 이슈와 인물, 문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자율과 개성의 집단지성의 속성.

- 시민정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정치가 아님. 그러한 정치는 1960년대 4.19세대, 1970~80년대 재야세대, 1990년대 민주화세대, 2000년 이후의 시민운동세대 등 연속성의 시각에서만 정당화. 수혈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집단도 한국정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
- 시민정치의 최소치는 기성 정당에 편입된 시민운동세력이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발전적이고 진취적 역할이고, 최대치는 중앙과 제도 정당에 수직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 이슈 영역과 지역에서의 기반을 갖는 무수히 다양한 대안적 정치모델.
- 왜 실패했나에 대한 평론자의 또 다른 해석. 대중적 전략의 부재만큼이나 큰 문제는 대선과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시민정치운동의 근시안적, 모험주의적 실험. 어떤 나라에서도 지방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 시민운동정치의 과제는 제도화가 아니라 이론화/ 중앙집중적 집약이 아니라 분산적 실험과 다양한 경험의 축적.

## 2. 조희연, '경계정치'로서의 시민정치 : 현장 논평

## II.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본 안철수 현상의 가능성과 한계<sup>1)</sup>

### 1. 안철수와 시민정치

#### ○ 원인에는 공감

- 안철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대부분의 학자와 언론이 주목하는 첫 번째 원인은 기존 거대 정당의 실패. 정쟁에만 몰두한 채 청년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무능하였던 정당정치의 실패이자 위기라는 것.
- 특히 민주화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정당들의 한결같은 무능력에 대한 실망과 공공성과 도덕을 겸비한 사회적 CEO로서 안철수의 대조.
- 좌우정당의 구태에 대한 혐오가 안철수 현상의 자양분. 좌파의 '빨 깃'(통진당 사태와 아메리카노)과 보수의 '빨 깃'(돈 공천과 립싸롱 내사), 야당세력의 빨 깃(김용민 막말 파동과 모바일 선거 관리의 오류에 따른 경선 파동).

#### ○ 안철수와 시민정치

- 안철수 현상을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학계와 언론계의 주류임.
- ※ 안철수 현상은 노풍에 이은 두 번째의 시민정치의 흐름. 자각한 시민들의 정당 참여, 정치참여, 선거참여가 본격화되는 서막(유시민. 20120817. MBC 100분 토론)
- ※ 안철수 현상은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 그들만의 리그인 정치권에 대한 시민 다수의 불만이 '안철수'라는 이름에 담긴 소통과 참여의 열망으로 드러난 게 반격의 본질. 시민사회는 숨 가쁘게 변화하는데도 정치사회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치 지체' 현상이 안철수 현상의 배경. 그 결과 기성 정치를 거부하는 '탈정치화'와 새로운 정치를 회구하는 '재정치화'라는 상반된 경향이 안철수 현상에 공존(김호기. 20120812. 《경향신문》).
- ※ 시민정치와 만난 '정치인 안철수': 유력 정치인위주의 수직계열화된 정당구조로

1) 본 자료는 지난 8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는 엘리트정치의 폐단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소수의 권한과 특혜로 끝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는 시민정치, 시민집권시대를 꿈꾸는 '안철수 원장'이었으면 한다(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 안철수 정치는 기존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성격을 지닌 중도적 시민정치(정해구, 2011. <안철수 현상, 시민정치의 부상, 정당정치 재편의 전망>.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45호).

○ 필자의 문제의식 : 시민정치 또는 포스트 민주주의의 분기점에서 안철수

### ① 시민정치의 경로

- 시민정치는 정당과 이익집단을 매개로 한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광범위한 결정권 행사에 기반한 정치.
- 핵심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의 정치권 진입이나 녹색당과 같은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대의제의 위기를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극복하는 것. 즉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시민정치세력의 공간 확장이자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의미.
- 안철수가 시민정치의 경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한다면 이는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

### ② 포스트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메시아주의

- 포스트 민주주의개념을 창안해낸 콜린 크라우치는 정치적 엘리트들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였던 민주주의 시대와는 달리,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서 그러한 목소리는 약해지고, 대신 거대 기업과 정치 계급의 영향력이 강고해지면서, 시민대중은 조작 가능하고, 수동적이며, 기껏해야 부분적인 정치 참여자의 지위로 떨어졌다고 분석.
- 크라우치는 우선, 정치 이슈의 높은 복잡성(즉, 전문성),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발전의 불일치, 산업노동자계급의 몰락과 분절화되고 조직화되기 힘든 서비스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을 주요 이유로 들면서, 포스트 민주주의로의 변화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정치권력이 증대하고, 이들의 시장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권력의 판매자로서 정치가 및 정치정당의 역할이 변형되었음을 강조.

-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노무현 전대통령), 삼성공화국, 삼성·LG 동물원(안철수) 등의 현상과 진단은 탈정치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높은 기대, 정치적 의사결정권과 책임에 대한 위임 등을 특징으로 한 포스트 민주주의적 현상과 일치(임운택. 20120821. <안철수와 포스트 민주주의>. 《프레시안》)
- 안철수 현상은 기성의 지역주의 정당정치가 약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정당정치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그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는 젊은층 등 무당파층이 주도하는 제3후보 현상. 더구나 사회 양극화의 절박한 현실에서 그 삶의 정치적 돌파구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메시아주의가 본질(정해구. 20120821. 《경향신문》)
- 안철수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안철수 현상은 희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것이고 정치 불신은 심화될 것(김정훈. 2012.3. <안철수 현상, 그리고 희망 혹은 희망고문>. 《경제와사회》 통권 93호).

## 2. 《안철수의 생각》에서 누락된 것 :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 문제는 출마여부와 시점이 아니라 시민정치의 비전이다
- 안철수의 결단이 지연되면서 최근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과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대선을 불과 100일 남겨 둔 상황에서 독자적 제3당 추진, 후보 단일화, 민주당 영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만 무성할 뿐, 야권은 시계 제로의 상황이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필자의 문제의식은 출마 여부와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 이후 거의 1년 동안 시민정치의 가능성과 비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안철수의 생각》은 복지사회, 경제민주화, 공정과 분배, 제주해군기지, 한미

FTA,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중요성 등 한국사회의 많은 현안과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특히 시민정치에 대한 견해와 비전을 누락하고 있음.

○ 시민정치가 아니라 관객 민주주의의 우려

- 대선을 겨우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주진영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안철수를 바라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법, 즉 '안철수의 마법'에 걸려 있다(정해구. 20120821. 《경향신문》).
-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안철수의 높은 인기와 기대는 노무현과 노사모, 오바마와 무브온의 관계를 고려할 때 훨씬 비조직적이고 분산적. 지지자들의 이념적 지향과 사회적 기반 역시 응집보다는 다원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안철수 현상,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안철수와 그 지지자들의 관계는 아직은 공화국의 주체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보다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철인왕(philosopher king) 또는 수호자(guardian)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객에 유사함.

### 3. 안철수의 시민정치의 성공 조건

○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장남이 되어야 한다.

- 노무현 전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의 중요성을 퇴임하면서 절감. 안철수 또는 그를 상징하는 어떤 정치가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장남이 되기 위해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국정운영의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민주당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전제는(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철수식 시민정치의 위상과 내용을 담보하는 것. 안철수가 만드는 정당과 정치, 유권자와 지지자의 역할, 정책과 입법의 프로세스, 인적 구성 등은 기존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 높은 지지도를 보내준 시민들에 대한 합당한 도리.

○ 시민정치의 단초: 청춘콘서트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 '국민콘서트'를 통해 지역별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또 다른 시간에는 그 지역에서 공적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국현안은 물론, 지역현안과 사람, 조직, 선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들. 선거이후에도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싹을 만들고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들. 지역이 모여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중심을 세우는 사람과 조직의 민주주의(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 핵심은 정당과 조직 원리로서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을 과감히 지구당과 지역조직에 위임하고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 1,700억에 달하는 주식기부(2012.11)와 직원들에 대한 주식의 무상분배(2000)를 개인의 미담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제개혁의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 즉 미국식 자본주의에 유사한 한국의 주주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나 총수자본주의를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 시민정치를 향한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와 정당정치의 협력적 선순환

- 사실 시민정치의 이론화와 대중화는 미진한 상황임. 주기적 촛불 시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NGO와 SNS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시민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 산업화와 정당정치는 늦었지만 정보화와 시민정치는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정당과 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지역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
- ※ “첫째 시민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연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입법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입법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입법 전략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민정치 관점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검토하겠습니다.”(국회시민정치 포럼 창립총회)
-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시민정치를 향한 실험과 도전을 체

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

※ ▷ 대표의원 남인순(민주통합당) 박원석(통합진보당) 이학영(민주통합당/ ▷ 책임연구의원 김기식(민주통합당)/ ▷ 소속의원 김관영(민주통합당) 김광진(민주통합당) 김상희(민주통합당) 김제남(통합진보당) 박홍근(민주통합당) 서영교(민주통합당) 송호창(민주통합당) 유승희(민주통합당) 윤관석(민주통합당) 은수미(민주통합당) 진선미(민주통합당) 최민희(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홍익표(민주통합당)/ 이상 국회시민정치포럼 회원.

- 19대 총선에서 녹색당의 실험에 대한 비판. 선거제도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총선이나 대선으로 직진하는 모험주의에 대한 반성.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알리고 당 조직을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것, 즉 기본으로 돌아가기. [참]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사회연구소 02-763-9581 [peace@pspd.org](mailto:peace@pspd.org)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 ③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